

# 자활읽기

Central Self-Sufficiency Foundation

VOL.3

2010 Spring

## Central Self-Sufficiency Foundation

초점기획 | 당신이 '희망'입니다

자활동향 | 미국·벨기에·일본

자활리포트 | 지역자활센터 실태 및 사업현황분석  
2009 자활나눔축제





## 일하는 당신은 떠오르는 해보다 찬란합니다

태양이 뜨는 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이 아니라  
 땀 흘리는 이의 내일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태양이 둥근 것은 항성의 중력 때문이 아니라  
 땀 흘리는 이의 희망을 향한 중력 때문입니다  
 오늘 지고도 내일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거칠고 굴곡진 당신의 손마디에서  
 세상은 다시 태어납니다

일하는 당신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입니다

## Contents



Photo Essay 일하는 당신은 떠오르는 해보다 찬란합니다  
 권두언 중앙자활센터 정덕규 원장

### 초점기획 당신이 '희망'입니다

- 6 인터뷰 I <장애가 놓인 밥상> 대표, 김영숙·김동완 부부
- 10 인터뷰 II 부산광역시 자활인력지원본부 강순자 씨
- 14 인터뷰 III 서울 광진지역자활센터 박진수 실장

### 자활동향

- 18 미국 미국의 근로연계사업과 WEP
- 24 벨기에 벨기에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제도 (2)
- 30 일본 리먼쇼크 이후 일본의 사회경제동향과 빈곤정책

### 자활리포트

- 36 리포트 I 지역자활센터 실태 및 사업현황분석
- 44 리포트 II 2009 자활나눔축제

### 자활뉴스

- 50 사업 자활생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  
신규사회서비스선도사업 현황  
미래희망돌봄사업
- 58 단신 2009년 중앙·광역자활센터 하반기 워크숍  
교육사업 소식  
마이크로크레딧 동향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자활복지포럼  
자활인큐베이팅사업 현황

# 자활! 조화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식개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참여자들 각자가 살아온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에서 누적된 좌절감, 즉 내적 부정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의 전환으로 긍정적인 행동 에너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사다난했지만 보람도 크고 결실도 많았던 2009년이 저물고, 2010년이 밝았습니다. 먼저 자활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노력했던 자활가족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면서, 자활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10년에는 우리들의 열정으로 희망을 창조하는 원년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년의 모토를 이렇게 설정해보았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간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으로 일을 즐길 수가 있으며, 그러한 생각의 결과는 성공이라는 달콤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지난해를 돌아해보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자활급여를 실시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출범 10년을 앞두고 자활사업의 낮은 성과나 성공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제도의 긍정성과 사업의 특성이 비판적 목소리에 가려지면서 현장에서 노력했던 실무자들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시키고, 급기야 피로감마저 누적된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0일 「2009 자활나눔축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은 매우 큰 소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 갑니다. 성과의 숫자적 표현이나 성공률의 높고 낮음보다 자활사업의 특성과 중요성을 전제로 근로빈곤계층의 자립을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통로로서의 긍정적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자활사업 현장에서 함께 비전을 정하고 목표를 성취해가는 242개 지역자활센터, 6개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그리

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16개 지부는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자활가족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의 진정한 자립이며, 우리의 목표는 자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자활가족의 행복을 실현하면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나 행동보다는 조화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2010년은 자활의 조화와 협력을 만드는 새로운 자활 10년을 열어가는 원년이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11월 10일 「2009 자활나눔축제」가 열리던 날 중앙자활센터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활의 결실이 가져오는 달콤함과 자활사업의 가능성이 무지개처럼 저의 가슴을 흥분시켰습니다.

저는 자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중앙자활센터의 역할 중에서 「교육사업」을 제1순위에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무자 전문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말합니다.

먼저, 자활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식개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참여자들 각자가 살아온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에서 누적된 좌절감, 즉 내적 부정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의 전환으로 긍정적인 행동 에너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활전문가 자격과정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자격증으로 발전시켜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활의 전문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취업지원사업 및 자활사업단과 자활공동체의 성과와 성공률을 높이게 되리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생산물 유통과 판로개척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실시된 성과평가기능을 철저하게 현실성과 실용성 위주의 평가로 전환하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사기를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활저널 「자활읽기」, 자활복지포럼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내고, 새로운 자활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것이며 자활사업의 건강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꾸며가겠습니다.

쉽 없는 파도가 바위를 깎듯이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2010년, 이기심이 아닌 조화와 협력을 통하여 자활사업의 희망을 창조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년 1월  
중앙자활센터 원장 정 덕 규



# 감사하고 나누는 그녀는 아름답다

부산광역시 자활인력지원본부 강순자 씨

부산광역시 자활인력지원본부의 직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 상담과 유지율에서 항상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강순자 씨.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 지원 대상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희망리본프로젝트로 스스로 행복을 만들며 다른 이들과 희망을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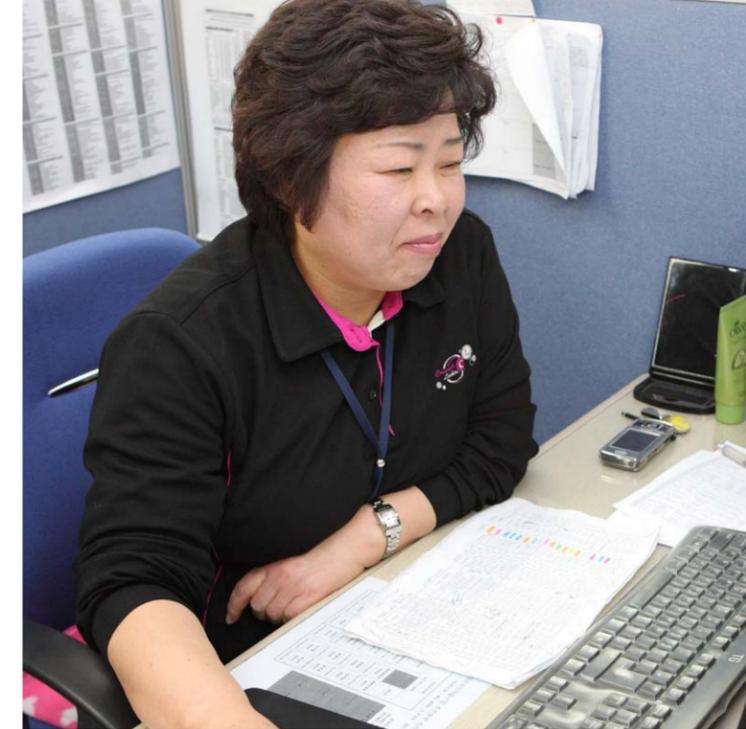
## 아직도 소녀 같은 53살의 아줌마

“내 얼굴이 못생겨 갓꼬 아이고 부끄러워”  
카메라를 보고 그녀는 금세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강순자 씨는 직장의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신이 뭐 얘기할 것이 있냐며 손사래를 쳤다. 나이 5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다는 그녀였다. 평범한 아줌마였건만 푸근한 인상과 흥조 띤 얼굴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걸 보면 그녀는 아마도 인생을 참 잘 살아온 모양이었다.  
초면의 긴장이 풀리자 그녀는 “사실은예~”하며 그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삭이기에만 했던 삶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젊은 날 부유하지 않아도 부족함은 없었다던 그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한 인생의 실타래는 그만 그것을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녀를 나락으로 내던져 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엄마이자 아내였고 그녀를 안쓰러워하는 어머니의 딸이었다. 그것이 그녀를 살게 했다.

## 순식간에 무너지 행복

부산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자활인력지원본부의 취업1실 한 가운데에 강순자 씨의 자리가 있다. 딸아이가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의 자리, 강순자 씨도 자신의 명패가 붙어있는 이 자리가 좋다.

“따르릉~”  
경쾌하게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통화를 하던 강순자 씨의 얼굴이 환해졌다.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고예? 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나이 마흔이면 아직 젊은데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하고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기술이 아깝다고예? 그거야 일 시작하고 나면 나중에 여유 있게 찾아볼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면 내일부터 열심히 해봅시다~”  
전화를 끊은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 중 또 한 사람이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출근길 그녀에게 “잘 갔다 와라. 차 조심하고...” 무뚝뚝하게 인사하던 남편이 떠올랐다. 말투는 그랬지만 그녀는 남편이 미안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전화를 했던 남자, 40대 초반 그의 나이 때 남편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다. 남편을 생각하자 그녀의 눈가가 잠시 축축하게 젖었다. 한때 숨씨 좋은 목수로 열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서 일을 했던 남편, 그리고 돌아온 한국에서도 여기저기 불러 다니기 바빴던 남편이었다.

그랬던 남편이 이제는 시각 장애인이 되어 그녀에게 의지해 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눈을 다쳤던 남편은 일하러 가족 뒤치다꺼리하러 제때 치료 한번 못 받아보고 실명하고 말았다. 거기에서 그만 불행이 그쳤다면 좋았으려면 주식에 손을 댔던 시동생이 큰 손해를 입었고, 남편은 동생의 빚을 갚기 위해 집을 내놓았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키웠던 남편이 그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닥친 일들이 버거웠는지 술에 빠져들더니 급기야 여러 번 병원 신세를 지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때가 IMF 때였다.

## 희망리본프로젝트로 다시 태어나다

강순자 씨는 돈 잘 버는 남편에, 두 아이를 키우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주부에서 하루아침에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하

는 가장이 됐다. 남편이 건강할 때도 반찬값이나 보태겠다고 일을 했었지만 막상 가장이 되고 나니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힘들었다. 생활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남편의 치료비까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키워야했고, 남편의 병을 고치고 싶었다.

“이웃에서 알려줘서 의료보호 대상자 신청을 했어. 동사무소의 지원으로 의료급여카드를 발급받아서 병원에 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남편이 실명을 하고 술로 세월을 보낸 지 10년이 다 돼가던 2005년, 그녀는 혼자 힘으로 버텨보겠다고 생각을 접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아이들 학비를 면제 받고, 병원비 부담이 줄면서 조금이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한창 사춘기였던 두 아이에게 엄마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았고 잠시도 쉬지 않았다. 길에서 전단지 돌리고, 건강식품을 팔기 위해 집집마다 초인종을 울리며 다녔다. 임시직, 계약직을 전전하던 그녀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의료보험공단에서 일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는 것이 적성에 맞다고 느꼈다.

한동안 일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그녀는 부산광역시 자활인력지원본부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다. 희망리본프로젝트! 그때 그녀가 바로 그 사업의 대상이었지만, 그녀는 대상자가 아닌 사업관리자로 입사지원서를 썼다.

**그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그들이 알고**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서류가 많았지만 입사지원서를 쓰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일주일 동안 그녀는 꼼짝도 않고 지원서 작성에 매달렸다.

“나이는 많았지만 제가 도전정신 하나는 있거든요. 1년 동안 어떻게 취업대상자를 관리할 건지 열심히 계획서를 써서 보냈지.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딸이 제일 좋아했어. 엄마가 공채에 합격했다고”.

일을 시작하고 매달 일정한 월급이 나오기 시작했다. 100만

원 남짓한 액수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형편이 좋아져서 행복했고 월급 통장을 보고는 ‘우리엄마 부자네’라고 감격스러워하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아 좋았다.

무엇보다 자신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생계안정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마음이 뿌듯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찾아주고, 취업을 유지하도록 상담관리를 하는 것이 강순자 씨에게 맡겨진 일이었다. 요즘같이 일감이 없다고 아우성인 때에 일자리를 찾아준 사람을 사후 관리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때때로 정부지원금에 의지해서 타성에 젖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고 여기서 알선해주는 일자리하고 안 맞으면 오래 버티지 못하데. 그런 분들은 일단 생계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지.”

강순자 씨는 한 번도 자신이 하는 일이 시혜를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무작정 일을 했던 힘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얼마나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 아픈 경험으로 상담자들을 먼저 이해해서인지 젊은이들은 엄마 대하듯 그녀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푸념도 한다.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풀어내기도 했다.

불만을 늘어놓으며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다. 일단 도전을 해야 원하는 기회도 만들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강순자 씨는 그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안정된 직장을 찾아주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넷과 전화기에 매달려 구인처를 찾는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은 그녀**

“면접을 보러갈 때 무조건 함께 갑니다. 그리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구인처 사람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얘기도 하고, 취업자들에게 용기도 주지. 제가 온전을 할 줄 알면 기동력이 있어서 더 빨리 많이 다닐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

취업을 도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기쁘고 행복하다는 그녀. 사무실에 붙어있는 취업유지율 현황판, 그녀의 이름 위로는 빨간 취업성공 그래프가 높다랗게 올라가 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취업을 도와준 분이 전화를 했어. 잠깐 만나자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는데 고구마, 감자, 깻잎 같은 것이 가득 든 봉투를 내밀어. 촌에서 가져왔는데 나눠먹자고 하면서... 너무 미안하고...”

다른 어떤 선물보다 사람들의 소박한 마음을 느낄 때 강순자 씨는 더 고맙다. 이렇게 푸근한 마음을 나누는 만족스런 직장이지만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이라 언제 그녀가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계약이 내년 2월까지 거든. 3년 동안 가능하지만 혹시 일이 계속되지 않아도 나에게 오는 다른 기회를 찾아 무엇이든 할 생각입니다. 저 같은 나이도 도전정신을 갖고 있으면 교육을 받던지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

그녀는 앞날을 걱정하는 대신 직장 동료들에게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고,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를 신청해서 직업상담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수도 없이 많은 직업을 가져봤다는 강순자 씨는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를 성장시켜야만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몸으로 익힌 듯했다.

적은 월급이지만 거기에 맞춰 살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월급날 가족과 외식을 할 수 있는 것에 행복해 하는 그녀. 살아온 날들의 아픔을 깊이 삭이고, 가족과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안아줄 줄 아는 강순자 씨의 얼굴에는 삶의 연륜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듯했다.



❖ **희망리본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가 2009년 4월부터 경기, 부산지역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2,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대상에 맞는 일자리 발굴, 연계 및 지속적인 취업 유지를 위해 돌봄서비스 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2009년에 622명이 취업에 성공해 31.1%의 취업률을 기록하였으며, 취업 후 6개월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수가 112명에 달해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이 78.9%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에 사업지역을 현행 2개 지역(경기, 부산)에서 4개 지역(인천, 전북 추가)으로 확대함으로써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용-복지연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http://hoperibbon.or.kr>



서울 광진지역자활센터 박진수 실장

# 자활인큐베이팅사업 자활의 삶을 디자인하다

박진수 실장은 5년 동안 일해 온 법률사무소 사무장 자리를 버리고 2002년 자활센터에 입사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은 바람이 훨씬 더 크기에 저지른 일이었다. 그로부터 어느덧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자활센터 실무자로의 삶, 그가 몸담고 있는 광진지역자활센터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이 궁금했다.

## 주민이 원하는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입사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무엇이었나?**

“일하는 우리가 희망입니다”라는 가치지향적인 자활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자활이라는 것이 참여주민들의 주체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판단했었다. 광진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을 관리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지역자활센터는 관리자 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으로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서 내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광진지역자활센터의 비전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주민주도형센터이며, 주민조직화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주민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활성화하고 지역자활센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일상화하고 있다.

**인큐베이팅사업 또한 참여주민의 주체성과 개별적인 특성과 환경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

예전에는 주민이 자활센터에 오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어 있는 사업단에 배치되었다. 간병사업단에 자리가 남아 있으면 비위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 와도 ‘토털도우미’라는 사업단에 결합이 되는 식이었다. 그러면 그 주민은 죽기를 각오하고 토하면서 어르신들 배변을 받아내는 일과 그만 두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단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잘 되는 사업단은 실무자가 막 끌고 가는 경우였는데 실무자가 떠나면 그 사업은 힘들어졌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단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처음 시도한 것이 언제인가?**

2004년이다. 처음엔 10명 정도로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 센터에서 만들어진 모든 사업단이 인큐베이팅 사업단이다. 주민들이 발의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쓰고,

센터운영회의 때 센터장과 실무자들 앞에서 브리핑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범사업단은 주민주도형으로 실무자가 개입을 안 해도 된다. 처음 세팅과정부터 참여한 주민이 나중에 실무자가 된 사례도 있다. 지금 자활센터에 1명, 돌봄센터에 3명이 있다.

**자활사업 참여주민이 인큐베이팅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역점을 두는 과정은 무엇인가?**

자립자활계획 수립과정이다. 참여주민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찾는다. 학력수준도 낮고, 계획서를 평생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사람들이므로, 단기간에 현실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여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시장 수요 조사, 또는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한다. 그 다음에 실무자와 함께 초기 계획서를 검토하고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인큐베이팅 사업단은 특히 담당 실무자의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광진지역자활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센터장 이하 7명의 실무자 모두가 인큐베이팅 사업단 47명 모두를 공동사례관리 한다. 다만, 상담은 나와 인큐베이터 지원팀장 둘이서 하고, 그 상담한 내용으로 케이스 컨퍼런스를 한다. 내가 내년엔 인큐베이팅사업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별 무리가 없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활실무자들끼리 서로 학습할 수 있고 다른 팀장들도 참여주민들에 대해서 대부분 알게 된다.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공동사례관리를 한다.

**지역자활센터 내 인큐베이팅 담당실무자들은 다양한 지식에 대한 습득이 기본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인큐베이팅사업단을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인큐베이팅 실무자는 신규실무자보다는 경력이 있는 실무자

여야 한다고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사업지침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기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참여주민의 다양한 자활경로를 파악하고 참여주민에게 맞는 자활경로를 함께 설계해나가기 위해서는 신규실무자보다는 경력이 있는 실무자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 인큐베이팅 사업단에 참여한 47명은 어떻게 개별적으로 자기의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하고 있나?

우리 센터에서 개발된 경로는 취업 경로, 창업 경로, 시범사업단 개발 경로, 이 세 가지가 안 될 경우 선택하는 사업단 이전 경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창업을 예로 든다면, 만약 이미용 창업계획서가 센터에서 통과되면 거기에 맞는 세부 계획을 세운다. 자격증이 없으면 3개월 안에 공동부업장과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 다음엔 파견을 나가 3개월을 미용실에서 실습을 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원장의 평가도 받는다. 이후 마이크로크레딧 운영단체인 「신나는 조합」과 연계해서 창업건설링 교육을 따로 받는다. 이 과정까지 가면 「신나는 조합」이 원하는 정도의 사업계획을 쓸 수 있게 된다. 거기까지 가면 99% 이상이 마이크로크레딧 대출로 창업에 성공한다.

### 인큐베이팅 사업단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사례를 추천한다면?

「신나는조합」에서 3개월 창업교육을 받으시고 대출을 받아 오리고기 식당을 창업하신 분이 있다. 이 분은 초기 자립자활 계획서 작성 시에는 흡소핑몰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해오셨는데, 그 당시 겨우 컴퓨터를 배우는 단계였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자립자활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전 식당운영 경험을 다시 보완하여 식당을 개업하시게 되었다.

이처럼 인큐베이팅사업단 사업은 하나의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기보다는 참여주민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므로, 참여주민들의 진정한 자활의 기본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진지역자활센터의 취·창업자활 성공률은 2008년 기준으로 26%에 달한다. 그런데 박진수 실장은 이 성과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대부분이 학력이 낮고 근로능력이 떨어져 단순한 취·창업 성공률만으로 자활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사랑이 깊어질수록 고민도 커진다

인큐베이팅 사업은 어쩌면 탈수급, 탈빈곤이 목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참여주민들에게는 과정 자체가 경제적인 자활을 떠나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연습하게 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갖게 하는 것과 같은 좀 더 다른 목표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의 긍정적인 면이다. 그런데 그런 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다. 우리 센터에 일본어 학원에 다니면서 번역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주민이 있다. 작년 11월에 번역사자격증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 인큐베이팅 사업단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분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연장을 시켜준다. 하지만 공동부업만 하고 있는 다른 주민은 그걸 볼 때 심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 인큐베이팅 참여기간은 참여주민 누구나 6개월인가?

개인별로 기간이나 경로가 모두 다르다. 확실한 창업계획서라면 바로 「신나는 조합」에 보낸다. 요양보호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토털도우미 사업단에 가겠다고 하면 굳이 인큐베이팅 6개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단지, 자활이 뭔지 알아야 하니까 단 하루라도 무조건 인큐베이팅사업을 거친 다음 네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마을 공동체

다른 팀장들도 업무가 많겠지만 특히 인큐베이팅사업단을 맡고 있는 실장이나 팀장은 개인별로 욕구나 상황을 다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상담 지원을 하려면 일이 엄청날 것 같다. 농땡이도 치고 그래야 한다(웃음). 인큐베이팅 담당은 하려고 하면 일이 끝이 없다.

###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는가?

가장 큰 차이라면 내 사업단이라는 개념을 버린 것이다. 과거에 우리도 마치 사업단을 자기 것처럼 여겼다. 나도 내가 맡고 있는 사업단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면 좋게 들리지 않았다.

지금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사업단은 우리 것도 아니고 주민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한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단지 길을 잘 찾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 집중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숫자가 10명이 넘어가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당연하다. 4명의 실무자가 10명 이상의 상담을 하는 것은 무리다. 실무자가 좀 더 있었으면 한다. 우리 센터는 6명이 102명을 지원하고 있다.

더군다나 나는 인큐베이팅 담당 팀장과 둘이서 47명을 담당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노동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되면 좋겠다. 27평도 안 되는 공간에 30명이 앉아 쇼핑백을 접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유해한 먼지로 공기가 너무 탁하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도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활에서는 1년차가 되면 중견실무자라고 한다. 6개월 버티는 실무자가 거의 없다. 다행히 우리 센터는 장기근속자가 많다.

### 광진지역자활센터는 왜 장기근속자가 많은가?

아름다운 분이 많다. 같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보고 센터장과 동지 관계처럼 의지를 갖고 일하고 있다. 아무리 근사하게 포장한다고 해도, 참여주민들과 연대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장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싸운 적도 있다. 그때 좌절이란 것도 느낀다. 3일간 결근한 분이 있는데, ‘내가 3일 안에 그분에게 갔더라면 계속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경험도 있다. 이런 안타까움과 안타까움이 만나서 서로 의지가 되고 동지가 되는 것 같다.

### 인큐베이팅사업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보건복지부나 중앙자활센터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앞서도 말했듯이 인큐베이팅사업이 초기단계이므로 전담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인큐베이팅 사업단은 우리센터에서 진행되는 4가지 경로가 정답이 아니며, 지역사회의 특성, 참여주민의 환경, 개인적 욕구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지역센터는 맞춤형 인큐베이팅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담관리자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차원에서는 전담관리자들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 즉 인큐베이팅사업 전담관리자들이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기본적인 자립자활계획 수립 프로세스에 대한 매뉴얼 개발 및 교육을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 미국의 근로연계사업과 WEP

● 한국의 자활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급자가 공동으로 일하는 자활근로사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이후에도 자활공동체를 통한 공동창업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개인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보다 유럽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참고하거나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실제 미국에서도 개인 취업에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와 비슷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는 주(州)들도 많다. 따라서 이번에는 미국의 자활근로사업과 이를 둘러싼 이슈인 자활참여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들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보려 한다.

## ➤ 근로체험프로그램 (Work Experience Program : WEP)

한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일원화된 공공부조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공공부조는 크게 노인과 장애인 대상의 SSI(Social Security Income),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와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GA(General Assistance)로 나누어진다. 1995년 이전에는 미국에서도 공공부

조에 대한 수급이 대체로 관대하거나 무조건적이었다. 하지만 1996년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조정법(PRWORA)’이 통과된 이후, 근로연령대에 속하는 TANF와 GA수급자들은 개인적인 구직활동이나 국가가 제안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만 복지급여를 받게 되어 있다. 바로 개인구직활동 외에 선택지로 제시된 자활근로사업이 바로 ‘근로체험프로그램(Work Experience Program: WEP)’이다. 일원화된 행정시스템을 가진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마다 다른 WEP를 운영하고 있

어서 이를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WEP프로젝트들은 대체로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에 주당 20시간에서 40시간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복지급여나 (일부 주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아래 <표1>은 그중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특히 뉴욕 주의 WEP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활근로사업으로, 뉴욕 시의 경우만 해도 40,000여 명의 TANF와 GA수급자가 개인구직활동이 아닌 공공영역의 WEP에 참여하고 있다. 보통 뉴욕 시의 총 수급자가 60,000여 명 정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80%가 공공영역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노동부가 주

관하는 구직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자활센터와 정부가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한국의 경우처럼, TANF와 GA수급자들도 정규노동시장에서 구직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TANF수급자는 한부모가정의 여성가장들로 육아와 노동을 함께 해야 하고, GA수급자의 경우는 대부분 나이가 많고, 저숙련 남성으로, 특히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이민자가 많다. 따라서 시장취업보다 WEP사업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공통점은 한국의 5대 표준화 사업처럼 뉴욕 시도 <표2>와 같이 5대 중점사업(공원관리사업, 청소사업, 행정조사사업, 대중교통사업, 보육간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 <표1> 미국의 주별 WEP 개요

주	WEP명	프로그램 내용
하와이	전환기회프로그램 (Transitional Opportunity Program)	TANF와 GA 수급자는 6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영리기업에서 기술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그 대가로 복지급여를 받는다.
캘리포니아	GAIN 프로그램	수급자는 일주일에 32시간 이상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복지급여를 받는다.
메인	현장훈련프로그램 (Field Training Program)	수급자는 공공단체나 영리기업에서 일주일에 20~26시간 이상 일을 하고, 시간당 임금을 받는다.
버몬트	공동체서비스일자리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구직에 실패한 수급자에게 공공영역과 비영리단체의 일을 주선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다. 미국에서 가장 관대한 자활사업에 속하며, 공식적인 고용계약은 없지만, 법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노동자성과 사회보장법상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뉴욕	근로체험프로그램 (Work Experience Program)	수급자는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정부가 주선하는 공공영역의 사업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복지급여를 받는다.

● <표2> 뉴욕WEP 주요 사업 내용

※참고: 전체 WEP사업은 주정부의 인력자원국(Division of Human Resources)이 총괄함

WEP 사업이름	WEP 사업내용
공원관리사업 (Parks WEP)	주정부의 공원관리국의 감독 아래, 도시공원 청소, 나무와 잔디 관리, 공원시설 개보수, 공원 개장과 폐장에 관한 일을 한다. 뉴욕시의 WEP 중 가장 규모가 크고, 6000명의 수급자가 참여하고 있다.
청소 및 보수사업 (Maintenance WEP)	시정서비스국의 감독 아래, 공공장소와 기관의 화장실, 바닥 청소 및 개보수, 공공빌딩의 개장과 폐장에 관한 일을 한다.
행정업무 보조사업 (Clerical WEP)	시정서비스국의 감독 아래, 고용서비스사무실, 지역노동센터, 주택관리국, 국공립학교에서 행정업무보조, 전화업무, 문서작성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대중교통업무보조사업 (Transit WEP)	지하철공사의 감독 아래, 역내 청소와 쓰레기 수거 등을 담당한다.
보육 및 간병사업 (Social service WEP)	비영리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국공립학교에서 보육, 양육, 간병, 취사업무를 담당한다. 여성인 TANF 수급자들이 대부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 WEP참여자의 노동자성이 문제가 된 계기는 이들이 공원, 공공기관, 대중교통시설, 보육시설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그곳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

물론 WEP는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근로사업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사업 내용, 사업 강도, 수급자의 특성으로 봤을 때 지역자활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자활근로사업은 실은 유럽의 모델들보다 미국의 WEP와 흡사한 점이 더 많다. 특히 맥락은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간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자활참여자의 노동자성’에 관한 문제는 뉴욕을 비롯한 여러 주에서 WEP사업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 ➤ WEP참여자의 노동자성에 관한 문제

한국의 자활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WEP은 “수급자의 자활 능력과 의지를 고양하고, 직업을 구하기 이전에 훈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EP사업은 ‘일을 통한 훈련(on-the-job training)’ 이지 정규직업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고, 따라서 사업참여 대가도 임금이 아니라 복지급여의 형태로 지급하는 주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뉴욕 시의 경우만 해도, WEP참여자는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노동을 하고 있고, 따라서 WEP사업을 자신의 일자리로 여기는 수급자가 많다. 특히 WEP참여자의 노동자성이 문제가 된 계기는 이들이 공원, 공공기관, 대중교통시설, 보육시설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그곳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WEP참여자는 정규업무를 보조하는 훈련생이지만, 공동체조직체인 Community Voices Heard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대부분의 수급자(84.28%)가 훈련 없이 바

로 업무에 투입되고 있고, WEP참여자 중 86%가 정규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WEP사업은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WEP참여자들은 저임금노동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s) 외에도, 정규노동자가 누리는 고용보험, 사회보장급여, 유급휴가와 단체교섭권, 노동조합 결성권에서 배제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부당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자신과 같은 기관에서 비슷한 기간(50주 약 40시간) 동안 동일한 일을 하는 단순직 노동자의 임금(연간 18,000~22,000달러)보다 훨씬 낮은 연간 3,600달러를 복지급여로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차시장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최저임금의 60~70%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급여다.

Community Voices Heard의 조사에 따르면,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이차노동시장에서 22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최대 연간 5,724달러를, 그리고 풀타임 노동자로 35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연간 10,344달러를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실 WEP사업에서 훈련을 받은 이후에 같은 기관의 정규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다면, 일시적인 낮은 급여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들은 WEP참여자를 정규직화하기보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그 일자리를 값이 싼 WEP참여자로 대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때문에 뉴욕 주는 사회서비스법을 통해 기관들이 정규직원을 WEP참여

자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도 했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노동력 대체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정규직 노동자와 WEP참여자 사이의 은근한 갈등을 조성하기도 했다.

WEP참여자의 노동자성의 문제는 WEP참여자들의 자발적 조직들을 통해 처음 제기되었다. 개인구직활동을 다른 수급자들과 달리 이들은 WEP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일을 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사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노동자성 문제를 공식적인 정책 이슈로 제기하는 데에는 공동체조직(Community Organizing Groups)들의 조력이 컸다.

## ➤ 공동체조직들의 WEP노동자캠페인

한국의 지역자활센터는 지역복지관과 함께 지역에서 공동체 조직활동(Community Organizing: CO)을 했던 지역빈민 단체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 기원과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미국에도 지역에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단체들이 많다. 1970년에 결성된 ACORN(Associa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 for Reform Now)이 대표적인 사례다.

ACORN은 42개 주에 걸쳐 1,200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고 저소득층 400,000가구가 회원으로 속해있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전국단위 민간단체로, 지난 40년간 저소득층의 복지와

사회정의를 높이기 위한 직접행동 외에도, 정부와의 협상, 법률적 변호, 정치참여를 꾸준히 해왔다. 이중에 ACORN이 WEP가 시행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주력하고 있는 활동이 바로 ‘경제적 정의와 WEP노동자의 동등한 권리를 위한 캠페인’이다.

캠페인의 핵심 요구사항은 WEP참여자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하는 공공영역 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최저임금, 아동양육서비스, 교통비, 직업훈련 등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WEP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을 정규직원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것, WEP노동자를 위한 민원접수창구를 개설하는 것, 그리고 영어교육, 고등교육, 유급훈련프로그램 등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유급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 등이었다.

뉴욕의 WEP노동자캠페인에는 ACORN 외에도, 지역기반 공동체조직인 뉴욕 시의 빈민지구 브루클린의 세입자조직 ‘5번가 위원회(Fifth Avenue Committee)’, 뉴욕 시 여성수급자 조직인 ‘공동체의 목소리(Community Voices Heard)’, 노숙인 법률지원단체인 ‘도시정의센터(Urban Justice Center)’, ‘사회적 서비스 노조(SEIU)’, 그리고 ‘Workfairness’가 참여했다. 특히 이들은 공청회를 열거나, 400~500여 명의 WEP참여자와 여러 차례 가두행진을 진행하거나 2,000~3,000여 명의 WEP참여자들의 항의서명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하려고 노력했다.



▶ACORN



▶Community Voices Heard

“ WEP노동자캠페인은 뉴욕 시만이 아니라 LA, 샌프란시스코, 밀워키, 뉴저지의 몇몇 카운티까지 번졌을 정도로 WEP를 둘러싼 주요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다. ”

이 캠페인은 실제로 WEP사업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캠페인을 통해 뉴욕 시가 개선한 사안들을 보면, 우선 WEP사업장의 안전기준이 강화되었고, 일부 WEP프로젝트의 경우는 복지급여와 함께 시간당 7.5달러의 임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공원관리사업(Parks WEP)과 달리, 참여자들의 노조조직권이 인정되는 공원기회 프로그램(Parks Opportunity Program)이 신설되었고, 인력자원국, 경제기회위원회(CEO), 장애인보조부(OTOA)와 같은 정부기관들에서는 WEP프로그램이 아닌 유급훈련트랙을 보장하기도 했다.

특히 WEP참여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지위인정을 이끌어낸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WEP참여자의 노동자성을 실제로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정부와 학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뉴욕 시 행정부는 사법부의 법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WEP참여자를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WEP 참여자를 공공노동자로 인정하면 원래의 두세 배가 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특히 원칙적으로 복지프로그램인 WEP에 수급자들이 안주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 ➤ 미국의 사례가 한국 자활사업에 주는 함의

그러나 WEP노동자캠페인은 2006년 기준으로 뉴욕 시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LA와 샌프란시스코,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 뉴저지의 몇몇 카운티까지 번졌을 정도로 WEP를 둘러싼 주요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다. 물론 WEP가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해도, 자활참여자의 근로조건이 WEP참여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2008년 자활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도록 설정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보통 한국의 자활급여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특히 복지급여가 보충급여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실질급여는 최저생계비에 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고용보험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지만, 자활참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은 100%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자활참여자의 노동자성을 얼마나 더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때문에 현재 노동자성 문제는 대대적인 논쟁이 있다기보다는, 주로 차상위계층을 둘러싸고 경

남, 전북, 그리고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WEP참여자와 자활참여자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WEP든 자활사업이든 모든 ‘근로연계복지’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공동의 딜레마’에 대한 것이다. 사실 근로연계복지는 ‘근로’와 ‘복지’라는 상충되는 행위가 얽혀있는 제도다. 원래 근로연계복지는 ‘복지에서 노동으로 이행(welfare-to-work)’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지를 대가로 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현장에서는 복지(수급자)와 노동(자)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복지수급자의 노동자성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법제처 등 정부 내부에서도 혼선을 빚었듯이, 이는 단순히 정부와 수급자 간의 이익분쟁이나 갈등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애매모호한 주제이다. 때문에 ‘근로연계복지’가 같은 공동의 딜레마를 미국 사회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해결해 가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 미국과 동일한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서로 같은 문제를 안고 간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점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WEP노동자 캠페인



# 벨기에 사회적기업의 약사<sup>略史</sup>와 제도 (2)

● 벨기에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은 공공정책에 의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증은 이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인정해주면서, 이들 기업들에 보조금, 사회보험료 고용주부담분 감면, 고용관련 보조금에 대한 접근권 등 여러 형태의 공적 지원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글에서는 노동통합을 중심적 목표로 두는 'EFT(현장기반 훈련기업)', 'EI(노동통합기업)'와 사회적 목적과 상업적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지위로서 'SFS(사회적목적기업)'에 관련된 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벨기에에서도 주로 불어권 지역인 왈롱지역과 브뤼셀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많은 경우 브뤼셀지역의 제도들이 왈롱지역의 제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왈롱지역의 제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EFT(Entreprise de Formation par le Travail, 현장기반 훈련기업)

### 제도의 발전

1980년대 초반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담당하던 현장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제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1987년 왈롱정부로부터 EAP(Entreprise d'Apprentissage

Professionnel, 직업견습기업)라는 지위의 제도화를 이끌어내었고, 1991년부터는 이들 지위에 대한 보조금 등에 관련된 정책들이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EFT로 제도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4년 DIISP(Dispositif Integre d'Insertion Socioprofessionnelle, 사회적직업적 통합을 위한 종합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노동통합 분야의 다양한 조직들과의 협력 및 조율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였다. 브뤼셀 정부는 1995년 AFT

(Atelier de Formation par le Travail, 현장기반 훈련작업장)이라는 지위를 제도화하여, 인증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다.

### EFT의 목적

EFT는 훈련생들의 개별적인 욕구와 이들에 대한 사회심리적 관찰에 기반하여, 이론훈련 및 실제적인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통해 훈련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EFT가 제공하는 훈련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직자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찾거나, 상위의 훈련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습득 및 강화를 목표로 한다.

### 대상자

EFT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과 같다.

- FOREm(고용안정센터)에 구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 학력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 기초생활보장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학력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이 경우, CPAS(사회복지사무소)와 EFT는 관련 대상자에 관한 협약을 맺게 됨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 1) 장기구직자(최소 24개월 동안 구직자로서 FOREm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 노동시장 재통합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신청자(훈련에 들어가기 전 3년간 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구직신청 이전 3년간 실업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노동시장 재통합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신청자로 간주됨)
  - 3) 2년 동안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도기관이나 감호기관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외출시간을 허용받거나, 조건부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
  - 4) 관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벨기에에 머무를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위의 두 항에 해당되는 경우
- EFT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년 해당 EFT 수용능력 20% 정도의 훈련생은 일반구직자나 질병으로 인한 일을 그만둔 사람들로 충당할 수 있음

훈련생들은 생산활동에 대한 참가의 보상으로 EFT로부터 시간당 1유로의 수당을 지급받으며, 기본적인 수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이나 실업수당을 얻게 된다.

### 인증 신청주체 및 재인증

EFT는 비영리민간단체, 재단 또는 공공기관인 CPAS가 신청할 수 있다. EFT로 인정을 받게 되면, 'DIISP'의 틀 속에서 FOREm와 파트너십 협약을 맺게 된다.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1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인증이 되면, 이후로는 3년 단위로 갱신될 수 있다.

### EFT의 주요 활동

개별 EFT는 업종별로 여러 훈련단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각의 훈련단위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훈련은 이론 및 실기교육과 실제 생산현장에서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생산현장에서의 활동은 EFT에서 직접 기업형태의 작업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다른 일반기업에 기초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을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

EFT로 인증된 지 3년째부터는 훈련단위별로 최소 8,000시간의 훈련을 제공하고, 최소 6명의 훈련생을 받아야 한다. 훈련생에게 제공되는 훈련은 개인당 최장 18개월 또는 최대 2,10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훈련생들은 개별 훈련단위에서 최소 300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개별 훈련과정은 교도기관에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당 최소 9시간 이상의 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훈련단위는 생산활동이 훈련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정부가 정한 적절한 비율의 훈련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주요한 훈련활동 이외에도 EFT는 규정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해야 한다.

- 훈련생과의 상호합의된 목표에 기초하여 훈련생에게 초기상담, 심리적 사례관리, 개별적 평가를 보장하는 훈련계약을 체결
- 훈련기간 중 최소 10%는 심리적 사례관리 및 훈련생들의 집단적/개별적 평가활동으로 배정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메뉴얼을 구비해야 함. \*수혜자의 특 수성에 맞는, 참여적이고 혁신적인 훈련방법론 \*개별적 훈련 과 집단활동을 조합하는 접근법 \*훈련생의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의 현실을 고려한 이론과 구체적인 실천이 조합된 접근법
- 교육적이면서도 참여적인 일상적 평가과정과 사회적/기술적 측면에서 직업적 능력의 성취 정도에 대한 점검을 수행
- DIISP의 틀에서 하나 이상의 관련 파트너들과의 협약 체결
- 근로기준법의 준수

### 공공부문의 지원

처음으로 인증을 받거나, 새로운 훈련단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초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비를 위해 12,500유로의 보조금이 일회 지급된다.

기본적인 보조금은 훈련제공시간에 비례하여 훈련시간과 훈련생 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간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인증 받은 첫 2년 동안은 최소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교육담당자, 프로젝트 담당자, 훈련교사, 행정담당자)에 대한 인건비의 (전일제 환산) 1.5인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원한다. 인증 3년차부터는 제공되는 연간 훈련시간이 적어도 인증을 받을 때 결정된 시간의 90%에 달한다는 조건 아래, 훈련시간에 따라 계산된 연간보조금이 3년 동안 보장된다.

### 현황

2008년 현재 58개 비영리민간단체, 12개 CPAS가 158개의 훈련단위를 인증받아 운영 중에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축/집수리 45개 단위, 조정(유기농) 30개 단위, 식당 20개 단위, 가사도우미/청소 19개 단위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외에 문화, 전기용접, 재활용, 제빵, 판매, 사무행정, 운송, 봉제/의류, 보육, 인력지원, 전기가전 등의 업종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조직들로는 비슷한 철학을 공유한 EFT들과 일반직업훈련단체인 OISP들로 조직된 Federation AID, Federation ACFI, Federation ALEAP, Federation CAIPS 등이 있으

며, 이들 연합조직들의 연합체로서 Interfederation des EFT-OISP가 있다.

### ➤ EI(Entreprise d'Insertion, 노동통합기업)

EI는 벨기에 불어권 지역(왈론 및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유형으로서 취약계층 실업자로 하여금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는 EFT와 달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기본적으로 SFS의 지위를 선행해서 가져야 한다. EI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우 제한된 지원만을 받는 사업유형으로서, 인증을 받은 후 4년이 지나서 추가적인 취약계층 고용이 없으면 재정지원도 없어지는 구조라는 특징을 갖는다.

### 제도의 발전

1970년대부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EI의 개념이 형성된 것은 1993년부터이다. 1994년 왈론정부와 브뤼셀정부에 의해 EI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5년부터 4년 동안 12개의 시범사업이 내외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가들과 노조,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을 통해 1998년 왈론정부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브뤼셀지방정부의 지침이 제정되었다. 왈론과 브뤼셀의 노동통합기업들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왈론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대상자

EI는 다음과 같은 기준의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DEDP(Le Demandeur d'Emploi Difficile a Placer,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구직자) : EI에서 일을 시작할 때, FOREm에 구직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고등학교 학력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 DEDP+(Le Demandeur d'Emploi particulièrement Difficile a Placer, 일자리를 찾기 특히 어려운 구직자)
  - 1)EI에서 일을 시작할 때, FOREm에 12개월 이상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고등학교 학력을 이수하지 못하였으며, 직전 12개월 동안 전일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임금근로자로 150시간 이상 또는 자영업자로 4개월 이상 일하지 않은 사람
  - 2)EI에서 일을 시작할 때, FOREm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고, 고등학교 학력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 인증 신청주체 및 재인증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에서 살펴볼 SFS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SFS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노동통합기업으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주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 중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구직자가
  - 1)인증 후 12개월 동안 전일제로 환산한 인력의 최소 20%
  - 2)그 다음 12개월 동안 전일제로 환산한 연 평균 인력의 최소 30%
  - 3)그 다음 12개월 동안 전일제로 환산한 연 평균 인력의 최소 40%
  - 4)4년차부터는 전일제로 환산한 연 평균 인력의 최소 50%를 차지해야 함
- 관련 업종별 노사협의기구에서 결정된 단체협약과 SFS의 지위에 관련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기업 내에서 전일제로 환산할 경우의 최고/최저 임금 차이가 4배 이상 나지 않아야 함
-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자와의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EI에 의해 조직되는 직업훈련의 지속을 위해 FOREm과 협약을 맺을 수 있음

첫 인증은 2년간 유효하며, 다시 2년 후에 갱신될 수 있다. 두 번째 2년이 만료되면 인증은 4년마다 갱신될 수 있다. 위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인증신청서류에는 기업의 상업적 측면과 수익가능성에 대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의 실행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서술, 취약계층들의 사례관리를 위한 계획, 기업대표자의 (특히 경영의 측면에서) 능력과 경험에

- 대한 소개, 향후 3년간의 재무계획 및 사업기간 동안의 예산 계획이 포함된다.
- 인증된 EI는 매년 관련부처와 인증위원회에 다음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활동 내역
-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구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통합 및 직업훈련 방식. 이와 관련되어 실행된 수단들
- 기업의 대표자에 의해 제공된 노력에 대한 설명
- 사회적 기여와 연간회계에 관련된 사항
- 사례관리자에 의해 수행된 활동에 대한 설명

### 공공부문의 지원

인증된 EI에는 세 가지 유형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하나는 EI자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이는 기업대표의 보수 일부와 필요하다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경영을 위한 훈련에 사용되도록 지정된다. 이 보조금은 인증 후 3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또 다른 보조금은 대상집단인 취약계층 노동자들 개개인의 인건비에 대해 지원되는 것으로, 4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첫해	둘째해	셋째해	넷째해
기업에 대한 보조금	20,000유로	13,500유로	7,000유로	
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5,000유로	3,750유로	2,500유로	1,250유로

이외에도 주로 DEDP+ 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례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DEDP+ 대상자의 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직접적인 보조금 이외에도 EI는 연방정부에 의해 SINE(사회통합경제 고용수단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이 지위는 다른 유형의 노동통합 관련 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대상집단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동안 지위가 유지된다. SINE로서 EI는 사회보장 부담금에 대한 부분적인 감면, 적립금으로 기업내부에 남게 되는 잉여에 대한 소득세 공제,

특정 업종에 대한 부가세 감면, CPAS에서 급여를 지불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파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현황

2009년 현재 건축, 건물청소, 급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49개의 EIGA 왈론정부의 인증을 받아 활동 중이며 4,000여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었다. 특히 2004년 가사관리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실행된 이후, 이 분야의 EIGA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왈론지역 EIGA들의 상당수는 연합조직인 Atout EIGA에, 브뤼셀지역의 EIGA들은 FeBISP에 가입되어 있다.

### > SFS (societe a finalite sociale, 사회적목적기업)

SFS는 상법 10장 661조부터 669조까지의 조항에 기반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기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기업이다. SFS는 기본적으로 상업회사의 형태(협동조합,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를 가진다. 즉, 독자적인 회사 지위가 아닌 상업회사가 채택할 수 있는 하나의 '라벨' 이라 할 수 있다.

### SFS의 목적

SFS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어야 한다. SFS의 사회적 목적은 그 목적이 기업내부를 향할 때(노동자들의 복리증진과 같은) 내부적인 성격을 가지며, 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보다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실현을 지향한다면 외부적인 성격을 가진다. SFS는 스스로의 사회적 목적을 자율적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 SFS 지위의 획득

SFS지위는 다음의 9가지 조항을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절차에 따라 부여된다.

- 조합원들은 자산을 통한 이익을 제한적으로만 추구하거나, 전혀 추구할 수 없음을 명시

- 사회적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업의 주요한 목적이 조합원들에게 자산을 통한 간접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함

- 기업의 정관에 명시된 순서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 구성에 대한 방침에 따라, 기업의 내부적/외부적 목적에 적합하게 이윤(잉여)을 할당하는 방침을 명시해야 함

- 총회에서 투표를 할 때, 누구도 1/10 이상의 목소리를 가질 수 없으며, 기업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1/20 이상의 목소리를 가질 수 없음

- 기업이 조합원들에게 제한적인 범위에서 직접적인 자산상 이익을 주려고 할 때, 협동조합 관련 법에 따라 결정된 이자율(2008년 현재 6%)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년, 경영진은 해당 기업이 스스로 정한 사회적 목적을 어떻게 실현했는지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이 보고서에는 특히 투자, 운영비, 급여에 관련한 지출들이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어떻게 특정하게 사용되었는지가 설명되어야 함

- 노동자가 기업에서 일을 한지 최소 1년이 지난 경우, 원한다면 조합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명시해야 함

- 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중단된 경우, 늦어도 계약중단 1년 이후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함

-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조합원들의 기여분을 반환한 후에 남은 잔여재산은 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함

이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모델에 기초한 것으로서(투표권 집중의 제약, 노동자에 조합원 지위 개방, 분배 불가능한 적립금 등),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 가장 SFS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용이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SFS가 위의 조항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적립된 적립금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배분될 수 없게 된다.

### 공공부문의 지원

EFT나 EIGA와 달리, SFS는 취약계층 노동통합 프로그램에 제

약된 법적지위가 아니다. SFS가 EIGA의 지위를 확보한 경우에는 EIGA로서의 지원을 얻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SFS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당초 비영리민간단체가 원활한 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SFS로 전환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상업회사의 지위인 SFS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세금과 관련하여, SFS는 정관에 의해 이익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기업법인세의 적용을 받는다. 정관에 의해 이익배당을 금지한 경우에, 해당 SFS는 기업법인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비영리법인에 관련된 세금체계를 적용받는다.

### 현황

SFS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도화된지 10년이 지난 2005년 말 현재 벨기에 전역(네덜란드어권 및 불어권)에 384개의 SFS가 있으며, 이중 협동조합 형태가 256개, 유한회사 형태가 73개, 주식회사 형태가 33개이다.

### > 한국 상황에 대한 시사점

다른 맥락에서 발달했지만, 한국의 자활사업을 비롯한 사회적기업 현상들과 벨기에의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은 유사한 발달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벨기에 모두 경제위기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대응으로서 사회적기업 형태의 조직들이 등장했으며, 사회운동의 역동성 속에서 성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근로가능한 빈곤실업층, 벨기에는 저학력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미숙련층이라는 대상집단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경제활동을 통해 대상집단의 사회통합을 꾀하는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기존 민간부문의 운동이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벨기에에서 도입된 'PAC (Plan d'Accompagnement des Chomeurs, 실업자지원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강제 받은 실업

수당 수급자들이 EFT를 점차 찾게 되면서, EFT가 불성실한 참여태도를 보여주는 비자발적인 참여자들을 받아들여지고,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지자이면서 동시에 통제자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정부제도에 의해 참여가 강제된 조건부수급자들만을 받아야 했던 자활후견기관의 경험을 상기시킨다. 최근까지 공공부문의 실업대책들은 EFT와 EIGA를 초기 설립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업정책의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운동진영의 보다 폭넓은 비전에도 불구하고 일반 벨기에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노동통합'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제도화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회적기업의 출발점이 되었던 사회적경제의 보다 큰 비전 - 인간중심의 대안적인 경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기업운영, 지속가능한 발전, 연대적 가치 - 을 실현할 것인가? 이는 비단 한국과 벨기에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현상의 등장과 이에 따른 제도화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고민이다. 다음 글에서는 현장의 사회적기업들과 연합조직들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가고 있는지를 현장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Gregoire, O., "National Profiles of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 Belgium", WP no 03/08, ELEXIES Project, 2003  
Mertens, S., Bosmans, P. and Maele, C.V., "Entrepreneuriat cooperatif - Coup de projecteur sur une economie humaine, Conseil National de la Cooperation, Bruxelles, 2006  
Solidarite,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as a tool for promoting inclusion : Case of Belgium", WISE Project, 2008 (미발표 자료)  
www.econosoc.be  
www.ces-ulg.be  
emploi.wallonie.be  
www.saw-b.be



글 • 김석호 일본복지대학 사회복지학부 강사

# 리먼쇼크 이후 일본의 사회경제동향과 빈곤정책

●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발단으로 한 세계경제의 동시불황은 지구촌 곳곳에 큰 충격을 가져왔으며, 3년째를 맞이하는 올해도 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본 지면을 통해 리먼쇼크 이후 변화하는 일본의 사회경제동향과 빈곤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일본의 최근 사회경제동향 및 정부의 대응

리먼쇼크에 있어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충격의 영향이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보다 일본에게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도한 잉여생산, 선진국중심의 수출산업 구조, 엔화강세 등의 산업·경제구조의 문제점과 함께 파견근로제도의 과도한 도입, 사회보장비 감축 등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실질GDP 성장률추이(2008년도 -3.7% → 2009년도 -2.9%(예상치) → 2010년도 +1.1%(예상치)), 소비자물가지수(2009년 11월 기준 -1.7%, 9개월째 연속하락), 완전실업률(2009년 11월 기준 5.2%, 15~24세는 8.4%), 민간기업의 2009년 겨울상여금 지급액(전년

대비 - 8.6%), 생활보호 수급자통계(2009년 7월 기준 생활보호 피보호자 수 1,719,971명, 피보호세대 수 1,244,660세대, 15개월째 연속상승 중) 등의 각종 통계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동시불황의 영향으로, 급기야 일본정부는 2009년 11월 20일에 발표한 '월례경제보고'에서 '완만한 디플레이션 상황에 있다'라고 약 3년 반 만에 다시 '디플레이션 선언'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만 할 것은 위와 같은 수치보다 일본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의 배경에는 2001년 4월 26일 집권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 드라이브를 실시한 고이즈미정권의 각종 정책적 폐해들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하자면, 우선, 2004년 3월 1일 개정된 '노동자파견법'(통칭)으로 일반 제조업부문까지도 근로자파견이 가능하게 되어 거의 모든 업종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리먼쇼크의 영향으로 2008년 말 도요타자동차 등의 대기업이 파견근로자를 대량 해고함으로써 도쿄 시내 공원에 대규모 '하켄무라(派遣村)'<sup>1)</sup>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적 원인으로 된다. 또한, 매년 2,200억 엔의 사회보장비지출 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청이 조직적으로 국민들의 연금납부기록을 조작해 온 사실과 업무태만으로 연금납부기록을 누락시켜 온 사실들의 발각과 맞물려, 국민들의 노후불안 및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막대한 불신을 야기시켰으며, 시기적으로 세계경제 동시불황과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한편, 일본은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308의석을 석권함으로써, 2009년 9월 16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민신당, 사회당의 연립정권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는 고이즈미정권이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과 아베정권 이후 실정(失政)을 되풀이한 자유민주당 정권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기도 하였다.<sup>2)</sup>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안은 하토야마 연립정권은 75%의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출범하였지만,<sup>3)</sup> 사회경제적으로 세계경제 동시불황과 디플레이션의 극복(경기부양 및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의 비전 제시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負)의 유산(遺産)'으로부터의 탈출(실업대책 및 고용불안 해소 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 추진으로 미래불안감 해소(국민연금 개혁, 의료 및 개호서비스의 충실화, 저출산 및 사회양극화 문제의 극복, 생활보호의 충실 및 자립지원정책의 강화 등)와 동시에 국가재정적자 해소라는 난제(難題)들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 2009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대표-하토야마 유키오)



▶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하토야마 내각의 진용

러한 문제인식과 국가비전에 대한 대응들은, 2009년 10월 23일 긴급고용대책본부에 의해 마련된 '긴급고용대책', 동년 12월 25일 각의결정(閣議決定)된 '평성22년도 예산 정부안'<sup>4)</sup>, 동년 12월 23일에 각의결정된 '신성장전략(기본방침)' 등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

먼저, '긴급고용대책'에서는 하켄무라의 재현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듯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안전과 안심, 삶의 보람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

1) 해고된 파견근로자와 노숙자 등의 월동지원을 위해 NPO단체가 설치한 텐트촌으로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 '파견촌'으로 된다.  
 2)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헌정사(憲政史)상 민의에 의한 첫 정권교체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2009년 9월 18일자 조건, 그 외의 조사에서도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4) 하토야마 총리는 평성22년도(2010년도) 예산안을 '생명을 지키는 예산'으로 명명하고 있다.

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은 고용의 확보이다'라는 인식하에, ①긴급 지원조치로서 '긴급지원 액션플랜-빈곤·곤궁자 및 신규졸업자 지원', '고용유지지원 강화', '중소기업 지원', '여성 취업지원 등'을, ②긴급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추진으로서 '3개의 중점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추진'<sup>5)</sup>, '고용창출을 위한 기존시책·예산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성 22년도 예산 정부안'은, '콘크리트로부터 사람에게', '정치주도의 철거', '예산편성과정의 투명화'라는 '3가지 변혁'의 원칙하에 편성되었는데, 특히, '콘크리트로부터 사람에게'에서 정권교체에 의한 정책적 변화가 잘 나타난다. 대표적으로는, 육아지원(어린이수당의 창출, 고교무상화), 고용대책(고용조정조성금의 확대 등), 의료·개호(의료급부 산정기준의 개정 및 구급과,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의 중점화, 개호노동자 처우개선 등), 환경과학기술, 호별 소득보장제도 등의 농림정책, 경기활성화대책 등을 들 수 있다.

'신성장전략(기본방침); 찬란히 빛나는 일본으로'에서는 '수요로부터의 성장; 윤택한 국민생활을 지향하며'를 기본이념으로, 명목GDP를 2020년까지 650조 엔(2009년 473조 엔)으로 확대하며, 실업률을 3%대로 끌어내린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6개 전략분야의 기본방침과 성과목표'를 통해 신규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성장과 고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sup>6)</sup>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적 시련 하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하토야마정권은 현재의 시련을 타개하고 미래성장과 안전·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기존의 자유민주당정권과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퍼주기식 예산편성, 국가 재정건전화 전략의 부재, 구체적 성장전략의 부재 등의 비판 또한 동시에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룬 과학기술 선진국이 세계경제위기와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지속적 성장과 안전·안심 사회의 실현을 위한 고뇌가 담긴 국가전략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우리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 ▶ 일본 빈곤정책의 동향

### 실업 및 빈곤정책의 개혁방향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새로운 사회·경제정책 속에서 '생활보호 자립지원프로그램'(이하,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어떠한 정책적 변화를 이루고 있을까? 자립지원프로그램만으로 한정한다면, 아직까지 정책의 큰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립지원프로그램에 한정하지 않고 실업 및 빈곤정책이라는 조금 거시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토야마정권이 탄생하고 나서 가장 먼저 실시한 것으로, 생활보호제도 중 '모자가산'의 부활, 그리고 빈곤율의 공표를 들 수 있다. 모자가산은 자유민주당 정권시절, 겨우 30세대만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생활보호를 받지 않는 모자가정보다 소득수준이 높다', '모자세대의 자립을 보다 촉진해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2009년도에 완전히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약 10만 세대가 모자가산 폐지의 영향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하토야마 총리는 선거 때부터 '콘크리트로부터 사람에게'를 상징하는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모자가산의 부활을

주창(主唱)하였고, 당선 후 12월부터 모자가산을 부활시켰다.

이와 더불어, 빈곤율을 공표한 것 또한 정권교체에 의한 주요변화라고 하겠다. '1억 총중류사회'라는 말과 고이즈미정권 시절 타케나카 총무대신이 아사히신문(朝日新聞)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큰 문제시되는 빈곤은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에서 대변되듯이<sup>7)</sup>, 일본사회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빈곤문제는 특수한 문제, 극히 일부의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고이즈미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영향으로 일본사회 내에서도 양극화가 점차 사회적 화두로 되고, 나아가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하토야마정권은 이전의 고이즈미식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결별하고 실업·빈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빈곤율의 정부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된다.

수치상으로는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별반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나,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회정책상의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공식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큰 변화점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정부가 발표한 통계는, 2007년 상대적 빈곤율 15.6%(OECD가맹국 중 4위)과 2007년 한부모세대 상대적빈곤율 54.3%(OECD가맹국 중 최악)의 두 가지이다.<sup>8)</sup>

필자가 소개한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권교체와 더불어 실업과 빈곤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상술한 '긴급고용대책' 등에 잘 반영되어 있다. 주요내용만을 다시 정리해보면, 실업자와 빈곤·곤궁자, 신규졸업자에 대한 지원을 긴급 액션플랜으로 설정하여, 고용·주거·생활지원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헬로워크의 고용지원 기능 강화, 개호·의료·복지 등을 중심으로 긴급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전개, 생활보호제도 운



▶ 2008년 리먼쇼크이후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빈곤층 - 하켄무라의 급식을 기다리는 장면



▶ 기자회견을 하는 하토야마총리

용개선 등의 단기적 과제와, 의료개호분야 및 농업, 관광분야에서의 고용창출 및 인재육성, 사회적기업의 활용 등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고용창출 및 인재육성 등의 중장기적 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생활보호제도와 '자립지원프로그램'의 동향

필자는 전호에서 모자복지와 노숙인 대책, 생활보호의 동향 분석과 동시에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정책평가를 소개한 바

5) 3개의 중점분야로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제도에 해당하는 '개호고용창출'과 '그린(농림, 환경, 에너지, 관광)고용창출', '지역사회고용창출(사회적기업 등의 활용)'을 선정하고 있다.

6) 일본의 강점을 살리는 성장분야 로 ①그린 이노베이션을 통한 환경·에너지대국전략(세계 최고기술의 활용 등), ②라이프 이노베이션을 통한 건강대국전략(일본발 혁신적 의약품 및 의료·개호기술의 연구개발, 불안해소와 생애를 즐기 위한 의료·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 등)을, '프론티어 개혁에 의한 성장'으로 ③아시아 성장전략을 통한 일본의 성장기회 확대(아시아의 가교로서의 일본, 일본의 안전·안심 등의 제도를 아시아 국가에 등), ④관광 및 지역활성화전략을, '성장을 지지하는 플랫폼'으로 ⑤과학기술 입국전략, ⑥고용·인재전략(고용이 내수확대와 성장력을 지지함, 성장력을 지지하는 '팀버린형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고용창출과 decent work의 실현, 어린이는 성장의 원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속에서의 활력유지, 질 높은 교육에 의한 두터운 인재층)이 제시되었다.

7)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6년 6월 16일자 조간.

8) 두가지 통계 모두 2007년 기준이며, 중위소득의 50%를 상대적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 “ 기존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고용지원과 생활지원의 연계를 한층 강화한 보다 세부적이고 중층적인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전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있다. 여기에서는 그 이후의 생활보호제도의 전반에 걸친 정책동향과 자립지원프로그램의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생활보호제도와 관련된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으로는, 이전까지는 생활보호재정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비용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제도운용 면에서 생활보호수급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지침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sup>9)</sup> 세계경제 동시위기 이후, 생활보호제도의 운용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고용정세 악화에 의해 생활보호수급자는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후도 한층 그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0)</sup> ‘연말연시에 구직중의 빈곤·곤궁자가 다시 ‘하켄무라’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sup>11)</sup> 그리고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절히 보호를 행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와 관련한 국고부담을 요하는 경비의 확보’<sup>12)</sup> 등의 정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립지원정책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위의 생활보호제도 운용개선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최근 생활보호수급자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최근의 생활보호 피보호자 수 및 세대수를 보면, 2007년도의 피보호자 수 1,543,321명, 피보호세대 수 1,105,275세대가 2008년도에는 피보호자 수 1,592,620명(전년도대비 약 3.2% 증

가), 피보호세대 수 1,148,766세대(전년도대비 약 3.9% 증가)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도 통계는 아직 공식 집계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나 2009년 말 현재, 피보호자 수가 약 1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활보호수급자 및 세대의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기존의 고령자세대의 증가에 더하여, 최근의 양극화 및 불황으로 파견노동자의 해고 등으로 인한 비정규직 실업자들이 생활보호를 수급하기 시작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근로능력을 가진 생활보호 수급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정책방향일지 모르나, 근로능력이 낮은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고용지원과 생활지원의 연계를 한층 강화한 보다 세부적이고 보다 중층적인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전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은 2009년 3월에 발표된 ‘자립지원의 충실강화’ 방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즉, 여기서는, 자립의 조장이 최저생활보장과 함께 생활보호제도의 양대 목적이라는 기본적인 법이념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일층강화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현재의 경제·고용정세로부터 피보호자의 취로지원을 필두로 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추진은, 도입당시 이상으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보호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충실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사회안전망 지원대책 등 사업비보조금에 의한 지자체 실시체제정비의 지원확충, ②생활보호 수급자 등 취로지원사업의 추진 및 노동행정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강화, ③지자체의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상기와 같은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실시실적이 저조한 정신장애 장기입원자 및 노숙인의 지역생활 이행지원 프로그램, 고교진학지원, 다중신용불량자지원, 고령자 건강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지원,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대변되는 ‘일상생활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사회생활 자립지원 프로그램’ 또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생활보호행정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업무가 급증함으로 인해, 복지사무소 담당직원의 업무부하가 급격하게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업자 등 요보호대상자의 급증으로 인해 생활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요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선정, 각종 급여지급업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립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까지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의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서 지자체 실시체제정비의 지원확충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며, 복지사무소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인 복지사무소 공무원의 증원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자활사업도 효과성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가 있으나,

일본 또한 앞으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학술연구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정치환경상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분야로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자립지원 프로그램에서보다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위기로 최악의 실업·빈곤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싶어하는 것은 상황 속에서, 실업 및 빈곤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다 구체적으로는 취로지원 프로그램에서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리먼쇼크 이후 일본사회의 사회경제 동향과 빈곤정책 동향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일본은 현재 큰 사회적 시련기에 있으며, 이를 단기간에 극복하기에는 병세가 그리 간단치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일본국민은 실질적으로 거의 60년만에 첫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었으며, 그 힘을 바탕으로 처방전을 마련하고 치유를 위한 사회적 실험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현실과 사회적 실험들은, 아직 성장 중심의 한국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쩌면 정점을 지나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웃 선진국의 몸부림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부정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기술집약 및 수출주도형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양극화의 심화 등 다양한 면에서 일본과 닮은 면이 너무 많다는 점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일본을 참고로 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9) 이를 생활보호의 ‘적정화’라고 한다.

10)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관계주관과장회의’ 회의자료, 2009년 5월 21일.

11) ‘긴급고용대책’

12) 후생노동성 ‘평성 22년도 사회보장관계예산 등의 포인트’, 2009년 12월.

13)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관계주관과장회의’ 회의자료, 2009년 3월 2일.

2008년 지역자활센터 평가를 통해 본

# 지역자활센터 실태 및 사업현황분석<sup>1)</sup>

글 • 이용우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활능력의 배양, 기능습득의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조건부 생계급여제도와 연계하여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1개소씩의 설치를 목표로 2008년 11월 현재 전국에 242개소의 지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 중에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을 보유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의 고취와 자립능력의 향상을 지원하는 핵

● <표1>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실시상황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정현황	242	31	18	8	11	8	4	5	32	15	12	15	18	21	20	20	4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1) 본 논문은 중앙자활센터의 연구용역 보고서인 '지역자활센터 실태 및 사업현황 분석' (이용우, 2009)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심 인프라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별 분포현황은 <표1>과 같다.

이와 같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 2항에 의거하여, 지역자활센터의 규모별 예산지원 기준의 마련을 목적으로 전국 24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2008년 지역자활센터의 사업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사업분포 및 세부사업내용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성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함으로써 자활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지역단위에서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내용

본 논문은 먼저 지역자활센터의 기본적인 사업현황(예: 직원현황, 참여자 현황, 자활근로사업단 현황, 자활공동체 현황 및 자활성공 현황 등)에 대하여 지역별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지역자활센터의 어떠한 지역별 특성이 자활성공률의 지역적 편차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역단위의 자활성공률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은 지역자활센터의 다양한 요인이 자활성공률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각 지역 내 지역자활센터별로 적지 않은 특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한계를 노출한다. 따라서 지역별 기술통계에 뒤이어, 본 논문은 자활성공률의 센터별 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각 센터 단위의 자활성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활에 성공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활에 성공한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9년도 전국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규모별 예산지원의 기준 마련을 위해 2008년 11월 전국의 지역자활센터 242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전수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2008년 11월 30일 실시한 전수조사는 시·군·구 관할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자활담당공무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의 12개월이다. 또한 조사대상사업은 복지부의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복권기금·가사간병도우미사업 및 사회서비스 등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참여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즉, 지자체의 근로유지형,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및 민간기업에 의한 사회공헌사업은 제외되었다.

### 2. 지역자활센터별 평가항목

전국 242개소의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전수조사 시 측정된 주요 변수는 지역자활센터별 직원 수, 참여자(전체, 기초수급 참여자, 차상위·일반 참여자) 수, 자활근로사업단 수, 자활공동체 수, 자활성공률 및 참여자만족도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 수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의 12개월 동안 자활사업에 참여한 모든 인원수를 합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한 월평균 참여인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월평균 참여인원의 산출 시, 월조건 이행기준에 미달하거나 조건불이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여인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센터별 직원 수와 참여자 수를 활용하여 직원 1인당 참여자 수를 산출하여 이용하였으며, 기초수급 참여자 수를 전체 참여자 수로 나누어 기초수급자 비율

을 산출하였다.

자활근로사업단 수는 조사시점 당시에 운영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단 중 1년 평균 3명 이상의 참여인원과 6개월 이상 운영기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인정공동체 수는 평가시점인 2008년 11월 30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인정을 받은 공동체로 한정하였다.

자활성공률은 전체 참여자 중 자활에 성공한 참여자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자활성공자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 까지의 평가기간 동안 상하이동, 기초수급 탈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취업, 개인 창업 및 자활공동체 창업을 경험한 참여자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만족도는 '자활사업 참여자 만족도 평가표'를 이용하여 개별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합한 만족도 점수의 센터별 평균을 나타낸다.

### III. 결과분석

#### 1. 지역자활센터 평가항목별 분석

전국의 지역자활센터는 총 242개소로서 각 평가항목의 전국 평균은 <표2>와 같다. 먼저 지역자활센터의 직원 수 및 참여자 수에 대한 전국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자활센터의 평균 직원 수는 5.4명, 평균 참여자 수는 약 110명으로 나타나, 직원 1인당 참여자 수는 약 20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10명의 참여자 중 기초수급 참여자 수는 약 48명, 차상위 및 일반 참여자 수는 약 62명으로 참여자 중 기초수급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 42.8%로 나타났다.

관리·운영하는 사업단 및 인정공동체의 수는 각 8.1개와 4.2개로 나타났으며, 참여자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6.8점으로 조사되어 참여자의 만족도 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높은 만족도 수준과는 달리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 자활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32.3%에 불과해 전체 참여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자활센터 유형의 경우, 소규모형, 기본형,

● <표2> 지역자활센터 현황 : 전국 평균 (n=242)

구분		평균	표준편차
직원 수		5.4(명)	.91
참여자 수	기초수급 참여자 수	110.3(명)	37.93
	차상위·일반 참여자 수	47.9(명)	24.15
	참여자 중 기초수급자 비율	62.4(명)	26.67
	직원 일인당 참여자 수	42.8(%)	15.78
사업단 수		20.3(명)	6.01
인정공동체 수		8.1(개)	1.68
참여만족도		4.2(개)	2.02
자활성공률		96.8(점)	1.53
		32.3(%)	13.12
유형	2008년 소규모	13	5.4
	기본형	54	22.3
	표준형	118	48.8
	확대형	57	23.6

● <표3> 직원 1인당 참여자 수에 따른 자활성공률 \*p<.05, \*\*p<.01, \*\*\*p<.001

구분	명	자활 성공률	표준편차	자유도	t	
직원 1인당 참여자 수	20명 이하	139	32.40%	12.49	240	.137
	20명 초과	103	32.17%	13.98		

● <표4>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른 자활성공률 \*p<.05, \*\*p<.01, \*\*\*p<.001

구분	명	자활 성공률	표준편차	자유도	t	
기초수급자 비율	50% 미만	159	33.83%	14.03	216,2	3131
	50% 이상	82	28.94%	9.93		

표준형, 확대형의 4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2008년의 경우 표준형이 전체의 약 49%로 가장 주요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활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전체참여자 중 자활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지역자활센터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어떤 특징들이 자활성공률과 관련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역자활센터의 특징들을 평균을 중심으로 양분한 후, 이들과 자활성공률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지역자활센터의 다양한 특징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요인들이 자활성공률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1) 각 항목별 자활성공률의 차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분석에서는 지역자활센터들의 여러 변수들을 평균을 중심으로 이분한 후에 자활성공률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 (1) 직원 일인당 참여자 수와 자활성공률

먼저 직원 1인당 참여자수와 자활성공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3>과 같다. 직원 1인당 참여자의 수는 20명을 기준으로 '20명 이하'와 '20명 초과'로 구분하였는데, 각 집단의 자활성공률은 32.40%와 32.1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직원 1인당 참여자의 수가 많을수록 관리·운영상의 효율성 저하와 가중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자활성공률에 부정적일 수 있을 거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직원 1인당 참여자 수와 자활성공률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2)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자활성공률

센터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자활성공률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4>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을 50%를 기준으로 '50% 미만'과 '50% 이상'로 구분하여 자활성공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4>에 제시된 바와 같이, '50% 미만' 집단의 자활성공률은 33.83%인데 반하여 '50% 이상' 집단의 자활성공률은 약 5%포인트가 낮은 28.94%로 나타났으며, 이와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로 밝혀졌다

● <표5> 사업단 수에 따른 자활성공률 \*p<.05, \*\*p<.01, \*\*\*p<.001

구분	명	자활 성공률	표준편차	자유도	t	
사업단 수	9개 미만	133	34.54%	15.34	219,8	3.125**
	9개 이상	109	29.57%	9.08		

● <표6> 공동체 수에 따른 자활성공률 \*p<.05, \*\*p<.01, \*\*\*p<.001

구분	명	자활 성공률	표준편차	자유도	t	
인정 공동체 수	5개 미만	147	32.70%	12.85	240	.577
	5개 이상	95	31.70%	13.57		

● <표7> 센터유형에 따른 자활성공률 \*p<.05, \*\*p<.01, \*\*\*p<.001

구분	개	자활 성공률	표준편차	자유도	F	
2008년 센터 유형	소규모·기본형	67	34.86%	15.18	2,239	1,798
	표준형	118	31.18%	12.03		
	확대형	57	31.62%	12.46		

#### (3) 사업단 수와 자활성공률

다음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운영중인 사업단 수와 자활성공률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5>에 제시되고 있다. 위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업단 수를 평균을 중심으로 '9개 미만'과 '9개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자활성공률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표5>에 제시된 것처럼, '9개 미만' 집단의 평균 자활성공률은 34.54%로 '9개 이상' 집단에 비하여 약 5%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리·운영중인 사업단 수와 자활성공률의 부정적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센터의 역량을 넘어서는 무리한 수의 사업단 운영이 자활성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 (4) 인정공동체수와 자활성공률

앞서 분석한 사업단 수의 경우와 유사하게, 인정공동체의수를 평균을 중심으로 '5개 미만'과 '5개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자활성공률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는 <표6>에 제시된 바와 같이, '5개 미만' 집단과 '5개 이상' 집단 사이에는 약 1%가량의 자활성공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인정공동체 수와 자활성공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센터유형과 자활성공률

지역자활센터의 유형은 소규모,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의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소규모의 빈도가 적은 이유로 소규모와 기본형을 하나의 범주로 재구성한 후 센터유형에 따른 자활성공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규모/기본형의 자활성공률이 표준형과 확대형보다 약 3.2~3.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형과 확대형의 차이는 0.5%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센터유형별 자활성공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상관관계분석

위의 분석에서는 연속변수로 구성된 지역자활센터의 특징들을 평균을 중심으로 이분하여 자활성공률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반면,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연속변수로 구성된 지역자활센터의 특징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자활성공률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상관관계 분석은 투입된 변수들 간의 지나친 상호관련성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뒤이어 수행된 자활성공률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의 사전 작업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여러 특성들 중 자활성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사업단 수로 나타났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 <표8> 자활성공률과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p<.05, \*\*p<.01, \*\*\*p<.001

	직원일당 참여자수	기초 수급자 비율	사업 단수	공동 체수	200년 표준 형	200년 확대 형	참여자 만족도
직원일당 참여자수							
기초수급자 비율	.015						
사업단수	.281**	.214*					
공동체수	.471**	.253**	.233**				
2008년 표준형	-.084	.045	.046	-.017			
2008년 확대형	.491**	.208*	.353**	.566**	-.541**		
참여자 만족도	-.032	.040	.073	-.011	.016	-.058	
자활 성공률	-.012	-.147*	-.210*	.076	-.084	-.029	-.055

● <표9> 자활성공률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p<.05, \*\*p<.01, \*\*\*p<.001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
(상수)	87,962	51,758	1,699
직원1인당 참여자수	-.032	.167	-.193
참여자 중 수급자 비율	-10,844*	5,531	-1,961
사업단 수	-1,447**	.551	-2,627
인정 공동체 수	1,687**	.556	3,036
참여자 만족도	-.439	.537	-.818
2008년 센터유형			
표준형	-4,014	2,261	-1,775
확대형	-5,010	3,471	-1,443
N	242		
F	3,671**		
R <sup>2</sup>	.099		

높을수록 자활성공률이 낮아지며, 사업단 수가 많아질수록 자활성공률이 낮아지는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자활성공률 영향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앞서 전국의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역별 분석 및 지역자활센터의 여러 특징들과 자활성공률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나름의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으나,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개개의 특징과 자활성공률에 대한 관계만을 분석할 뿐,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상태에서의 관계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어떤 요인이 자활성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9>와 같다.

먼저 분석모형을 간략히 살펴보면, R<sup>2</sup>가 .099로 자활성공률에 나타나는 전체변량의 약 10% 가량이 현재의 분석모형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개의 지역자활센터의 특징들을 통해 자활성공률을 예측하고 있는 현재의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여러 특징들 중 자활성공률과 관련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세 개의 변수(참여자 중 수급자 비율, 사업단 수, 인정공동체수)가 자활성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중 수급자 비율은 자활성공률과 부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참여자 중 수급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자활성공률은 1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사업단의 수도 자활성공률과는 부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 수 1개 증가는 자활성공률의 1.4%포인트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정공동체 수의 수는 사업단수와는 반대로 자활성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지역자활센터의 인정공동체 수 1개의 증가는 1.7%포인트의 자활성공률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10> 전국 자활성공자의 현황

(n=4,502)

구분	빈도	%	
사업단유형	자활공동체	377	8.4
	자활근로	3944	87.6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4	0.1
	기타	177	3.9
업종구분	집수리	280	6.2
	간병	1247	27.7
	청소·환경정비	857	19.0
	폐자원(음식물포함)재활용	365	8.1
	도시락	82	1.8
	세차·세차	93	2.1
	영농	242	5.4
	음식물(외식)	162	3.6
	장애통합	319	7.1
	산모도우미	69	1.5
	기타	781	17.4
성공유형	자활공동체 창업	1419	31.5
	일반취업	2023	45.0
	복권기금, 사회서비스 바우처 참여	157	3.5
	개인창업	70	1.6
	자활특례	366	8.1
	탈수급	428	9.5
	기타	36	0.8
연령	30대 이하	697	15.5
	40대	1835	40.8
	50대	1488	33.1
	60대 이상	479	10.6
사업참여 기간	1.98 (평균년)	1.62(SD)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자활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지역자활센터의 여러 특징들 중 자활성공률과 관련 있는 변수는 참여자 중 수급자 비율, 사업단 수, 인정공동체 수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자원의 부족과 열악한 생활환경상 자활을 통해 자립하는 것이 어렵기에 참여자 중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자활성공률이 낮을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단 수와 인정공동체의 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활성공률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추가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 3. 자활성공자에 관한 분석

본 논문에서는 전국 지역자활센터의 현황에 대한 지역별 분석, 자활성공률의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자활에 성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자활과 관련된 여러 특성(예: 사업단 유형, 업종구분, 성공유형, 사업참여기간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10>은 전국 자활성공자의 자활관련 특징들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사업단 유형은 자활근로가 87.6%로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활공동체가 8.4%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구분은 원래 각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현황 조사에서 사용되었던 14개의 업종(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도시락, 세차, 영농, 세탁, 음식물(외식), 장애통합, 산모도우미, 환경정비 및 기타) 중 빈도수가 적은 유사 영역을 통합하여 11개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간병이 전체의 27.7%로 가장 주요한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소·환경정비(19.0%), 폐자원(음식물포함) 재활용(8.1%) 등이 주요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타업종이 17.4%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매우 다양한 업종 중에서 사회복지시설관련 도우미가 68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공유형의 경우, 일반취업이 45.0%, 자활공동체 진출·창업이 31.5%로 가장 주요한 성공유형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탈수급의 경우도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공유형 중 기타는 전체의 약 1%로서 대부분의 경우 차상위에서 소득인정액 초과를 통해 상향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활성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40.8%)와 50대(33.1%)가 전체의 약 3/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참여 기간(자활에 성공한 날짜-자활사업에 참여한 날짜)은 평균 1.98년으로 거의 2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이상에서와 같이 지역자활센터의 기본적인 사업 현황(예: 직원현황, 참여자 현황, 자활근로사업단 현황, 자활공동체 현황 및 자활성공 현황 등)에 대한 지역별 기술통계 분석, 자활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및 자활성공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각 분석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자활센터의 기본적인 사업현황에 대한 전국평균을 살펴보면, 지역자활센터의 평균 직원 수는 5.4명, 평균 참여자 수는 약 110명으로 나타나, 직원 1인당 참여자 수는 약 20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10명의 참여자 중 기초수급 참여자 수는 약 48명, 차상위 및 일반 참여자 수는 약 62명으로 참여자 중 기초수급자의 비율은 센터별 평균 42.8%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운영하는 사업단 및 인정공동체의 수는 각 8.1개와 4.2개로 나뉘었으며, 참여자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6.8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높은 만족도 수준과는 달리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 자활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32.3%에 불과해 전체 참여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활센터의 유형으로는 표준형이 전체의 약 52%로 가장 주요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현황에 대한 지역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특정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결과는 특별히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전체 참여자 중에서 자활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최소 22.6%에서 최대 47.25%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다른 변수들의 주목할 만한 방향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통계분석의 한계이기에,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여러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자활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자활센터의 여러 특징들 중 자활성공률과 관련 있는 변수는 참여자 중 수급자 비율, 사업단 수, 인정공동체수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중 수급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자활성공률은 1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수 1개 증가는 자활성공률의 1.4%포인트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자활센터의 인정공동체 수 1개의 증가는 1.7%포인트의 자활성공률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자원의 부족과 열악한 생활환경상 자활을 통해 자립하는 것이 어렵기에 참여자 중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자활성공률이 낮을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단 수와 인정공동체의 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활성공률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추가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 가능한 추론은 다음과 같다. 사업단 수는 평균이 약 8개인 반면, 인정공동체 수는 약 4개로 인정공동체의 수는 아직 지역자활센터의 관리·운영상의 능력 범위 내에서 센터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나, 사업단의 수는 이미 어느 정도 지역자활센터의 능력범위 가장자리에서 관리·운영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아니면 순전히 기능·공헌의 측면에서 인정공동체가 자활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사업단의 물리적 양은 관리·운영의 부담으로 자활성공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활에 성공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활에 성공한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형적인 자활에 성공한 참여자를 묘사한다면, “참여한 사업단유형은 자활근로로서, 간병관련 업종에 참여하여 일반취업에 성공한 40대 사람으로 자활에 성공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약 2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전국 242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2008년 지역자활센터의 사업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지역별 사업 분포 및 세부사업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지역별 자활사업의 동향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지역별 자활성공률에 초점을 두고, 지역별 자활성공률의 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자활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지역자활센터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참여자 개인단위의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참가자의 어떤 개인적 특성(예:성별, 연령, 학력 등)이 참가자의 개별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개인단위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활성공자의 특성에 관한 분석이 자활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자활에 성공한 참여자만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는다.

## 자활, 일을 통한 희망찾기! 2009 자활나눔축제 희망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하다!!

- 「2009 자활나눔축제」는 2008년까지 자활연수대회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자활사업 참여주민까지 포함한 자활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전국 각 지역의 자활사업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활사업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 등을 공유하고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지난 11월 10일 코엑스 D2홀은 1,500여 좌석을 가득 메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참여주민, 공무원, 일반시민 등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행사 참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야 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임을 고려한다면, 다소 이를 수 있는 11시부터 시작되어 행사 주최측이었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중앙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관계자들은 넓은 행사장이 걱정이었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을 뿐 11시 전에 이미 1,500여 석은 가득 차서 그제서야 행사관계자들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는 후문(?)이 있었다.

지금부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2009 자활

나눔축제」의 활기찬 현장 속으로 함께 추억의 여행을 떠나보자.

### D-1, 이미 축제는 시작되었다!

덜컹덜컹... 부르릉...

코엑스는 전문전시장이라 3층인 D2홀까지 엘리베이터로 짐을 실은 차가 올라왔고, 전시장과 뒤편의 창고 사이의 큰 문이 열리고, 높은 천장의 조명이 하나씩 커지면서 축제의 서막이 올랐다.

넓게만 보였던 행사장은 각종 시상식, 자활성공다짐이벤트, 장기자랑, 축하공연이 실시될



무대, 자활사업의 역사와 현황, 자활사업 수행체계, 자활영역에서의 사회공헌사업, 2010년 자활사업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제전시관>, 자활생산물 및 대표적인 자활사업을 소개할 <홍보관>, <포토ZONE> 등으로 자활의 희망이 하나 둘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자활사업 시작 이래 가장 많은 자활생산품이 전시되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 전시에 참여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16개 지부와 (주)온케어,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수행기관, 희망키움뱅크를 지원받은 창업가게 등 41개 부스, 100여 품목의 자활생산품과 자활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업들이 홍보되었다.

특히 제주도 등 행사 당일 도착해서 전시부스를 정리하는 일은 시간상 불가능한 먼 지역의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은

하루 전 날 올라와 행사를 준비하는 열의를 보여주었고, 정말 가게를 하나 차려도 될 정도의 다양하고 많은 상품들을 준비해와서 또 한 번 그 정성에 감탄하게 만들었다.

이번 행사의 또 하나의 중요사안은 단연 '신종인플루엔자'였다. 9월에 치르기로 계획되었다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염려로 한 차례 연기되어서 다시 실시된 만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는 기본이었고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였다. 게이트형식으로 제조된 최첨단 전신소독기, 열감지기, 손소독기, 마스크, 행사장 실내 소독 등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루 전 날 꼼꼼히 체크하였으며 행사가 끝날 때까지 신종플루로 인한 긴장을 풀지 못했다.

무대 위, 무대 아래 행사장의 정리를 마치고 나니, 축제 하루 전 날의 시간은 어둡한 밤을 향해 가고 있었다.



## D-DAY, 새로운 장을 펼칠 11월 10일이 밝아오다

11월 10일, 가장 급선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국 각지에서 새벽밥을 먹고, 또는 아예 버스에서 아침을 먹으며 올라오는 전국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실무자들이 과연 행사시작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행사장이 1층이 아니고 코엑스가 워낙 넓고 처음 오는 사람 에겐 다소 복잡한 구조라서 007작전을 세우듯 단체버스로 오는 경우에는 어디서 내려서 어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와야하는지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했음에도 여전히 걱정은 태산이었다. 10시 30분이 넘어서도 반도 차지 않은 좌석... 하지만, 그런 걱정은 11시 5분 전쯤 사라졌다. 새벽 4

시에 출발한 곳도 있었다는 실무자의 이야기에 얼마나 고맙고도 미안했는지...

그렇게 우리들의 축제는 김성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2009 자활나눔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참석해서 1부 행사를 모두 함께 해주셨던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님, 민주당 백원우 의원님, 행사후원사였던 신한은행 부행장님, 중앙자활센터 김상균 이사장님, 한국지역자활센터 이병학 회장님, 하루 전 날 취임하신 중앙자활센터 정덕규 원장님, 한분 한분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을만큼 많이 참석해주신 지역자활센터장님, 광역자활센터장님, 한국지역자활센터 지부장님 등 많은 내빈들로 인해 축제는 더욱 빛이 났다.

1부 행사는 내빈들의 인사말씀과 자활공로·성공수기 시상,

자활유공자 표창, 자활명장 표창으로 이어졌다. 전재희 장관님은 비 새는 집에서 잠을 자도 희망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서 오늘의 힘겨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하시면서도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에게 희망 또한 잘 간직하자는 제안을 하셨다.

잘 차려진 무대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모두에게 의미있는 일이겠지만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자활명장」상을 받은 3명의 자활공동체 대표들에게는 더욱 남다른 시상식이 되었을 것이다. 「자활명장」상은 자활사업 참여주민 중 자활에 성공하여 많은 참여주민에게 모범이 되는 분들에게 드리는 상으로, 시상자로 결정되고 나서부터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자활공동체 대표로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또 다른 참여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3명은 진정한 이 시대의 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진 1부의 하이라이트, 자활성공다짐이벤트가 시작되었다. 주요내빈과 자활명장 3분이 함께하는 이벤트는 배모형의 키를 돌리면 희망의 닻이 올라가는 역동적이고 힘찬 퍼포먼스였고, 닻에 새겨진 “자활의 희망과 의지를 가득 싣고 힘찬 항해를 함께 출발합시다” 문구가 펼쳐졌을 때는 1,500여 명의 참여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활의 희망을 향해 힘찬 항해를 떠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 1부 무대행사가 끝나고 테이프커팅으로 개장된 전시장!

41개의 자활사업 홍보관은 일회성 행사를 위한 부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까웠을 만큼 다양하고도 특별한 이벤트들로



차려져 있었으며, 자활생상품의 상품성과 시장경쟁력을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이다.

자활공동체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는 주로 알고 있는 농산품, 식품가공품, 비누제품, 각종 수공예품 이외에도 인형극, 가구 제작 등을 운영하는 자활공동체도 있었고, 보편화된 자활생상품들도 제품의 다양성이나 디자인 등에서 많은 발전이 었 보였다.

각 홍보관은 단순한 전시뿐만 아니라 자활생상품이나 사업내용을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서 춘천닭갈비 시식, 한지공예품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등을 최고 인기였고, 즉석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져 홍보관은 말그대로 시끌벅적한 축제의 맛을 살렸다.

2009년 자활사업의 새로운 변화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초대된 사회서비스 분야 국내 최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주)온케어는 노인생애 체험을 준비했고,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 수행기관들은 [직업심리체험관], [취업준비관]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상담을 즉석에서 해주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인 「희망키움뱅크」에서 지원받아 창업한 '수수꽃다리' (꽃집)와 이름도 귀여웠던 '콩아네' (핸드메이드커피전문점)는 가게에서 직접 판매하는 상품들을 전시, 시연해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많은 행사 참여자들을 모두 편안하게 식사대접을 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행사장 내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신해서 못내 아쉬웠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축하공연, 장기자

랑이 준비된 2부 행사가 시작되었다. 개그맨 맹행기 씨의 맛깔스런 진행으로 행사장 분위기는 점점 열기를 더하고 5개 지역의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및 참여주민들이 준비한 통기타 연주와 노래, 최신댄스공연, 수화공연, 전문가 수준의 연주와 트롯가요 등의 장기자랑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엔돌핀을 마구 생겨나게 할 만큼 신나는 무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가득찬 열기로 이어진 자활나눔축제는 초청가수 박현빈의 공연과 행운권 추첨까지 마치고 막을 내렸다.

이전 어느 행사보다 규모가 커서 언론홍보도 제법 이루어져서, 자활사업과 자활생상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내·외부적인 평가와 늘 열심히 일하며 자활에 성공해 오신 많은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의 성공사례를 발굴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더 컸던 「자활명장」 시상 등

의 성과도 있었지만, 더 나은 자활나눔축제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실내공간에서 평일에 진행하다보니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했고, 축제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인 행사기획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도 한계로 정리되었다.

2010년의 자활나눔축제는 2009년의 한계를 극복하는 탄탄한 기획으로, 2010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 1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올 자활사업 10년을 준비하고 공유하는 진정한 나눔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 자활생산품 유통 활성화 사업

'09년 사업개발 및 지원사업의 중점은 영세하게 운영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사업단을 규모화와 전문경영시스템 적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 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사업수행기관별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선도사업으로 지정받거나 광역시도를 통해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09년 공모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10년도에도 자활공동체 규모화 및 경쟁력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그 범위를 자활사업단이 생산해내는 생산품 중 우수한 제품에 대해 유통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10년도 자활생산품유통활성화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사업단중 성공모델로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는 생산품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자활사업단이 생산해내는 상품의 질에 대한 신뢰는 있으나 그 상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 권하기에는 어딘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 2009년 공모사업 성과

사업명 및 사업수행 기관	사업 성과
○ 자활집수리사업의 주거복지마케팅 전략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 (사)한국주거복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해양부 허가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설립 (2009. 4. 27) -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li> <li>·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위한 컨설팅 및 사업 지원</li> <li>·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li> </ul> </li> <li>▶ 주거복지학교 진행 (8, 9, 10월에 걸쳐 3회 진행) - 1차 41개 업체 48명 / 2차 36개 업체 41명 / 3차 45개 업체 50명 참여</li> <li>▶ 공동브랜드 활용 확대 (간판, 명함, 차량홍보물 등)</li> <li>▶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선도사업 지정 (2009. 12. 4 협약), (총사업비 7억 2천만 원 중 국고지원규모 5억 원)</li> </ul>
○ 글로벌 자활기업 설립을 위한 생산 네트워크형 허브(herb)사업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남지부 외 11개 지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자활기업 설립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2009. 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업인지도 향상 및 투자유치</li> <li>- (참가자) 200여 명</li> </ul> </li> <li>▶ 중모동 완성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육묘대량생산체계구축</li> <li>- (장소 및 규모) 진주시 수곡면 (500평)</li> </ul> </li> <li>▶ 육묘생산 및 불출 (11개 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li> <li>▶ 경상남도 진주시 '10년도 자활시책사업비 2억 원 교부 예정 - (용도) 폐교 리모델링 비용 등</li> </ul>
○ '제철에 그곳' 자활유통사업단 사업 (사)전북광역자활센터 외 14개 지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인력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자활농산물 유통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확보</li> <li>- (기간) 4월 ~ 9월(6개월)</li> <li>- (참여인원) 30명</li> </ul> </li> <li>▶ 도내 무료급식소 영양사 친환경 농산물 교육을 통한 물류 기반 확보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영양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69명</li> </ul> </li> <li>▶ 직거래 장터 운영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 및 남원 일대 아파트 단지</li> </ul> </li> <li>▶ 개 무료급식소 및 6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4곳의 지역자활센터 생산 친환경 농산물 물류 시행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매출(3,538천 원) → 8월 매출(10,702천 원) → 9월 매출(23,451천 원)</li> </ul> </li> <li>▶ '10년도 전라북도로부터 '사람의 자활장터' 사업비 2억 원 교부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1억 원(물류센터 임대보증금), 1억 원(저온창고 설치 및 냉동탑차구입 등)</li> </ul> </li> </ul>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활사업 환경에 적합한 마케팅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적용 판매 촉진과 매출증대를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자활생산품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자활생산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공모델 전파를 통해 신규 사업아이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효과적인 컨설팅을 통해 수익증대와 함께 창업성공률을 향상시

켜 사업 참여주민들의 자활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중앙자활센터만의 힘으로는 결코 그 기대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다.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광역·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사업 참여 주민들의 노력과 희망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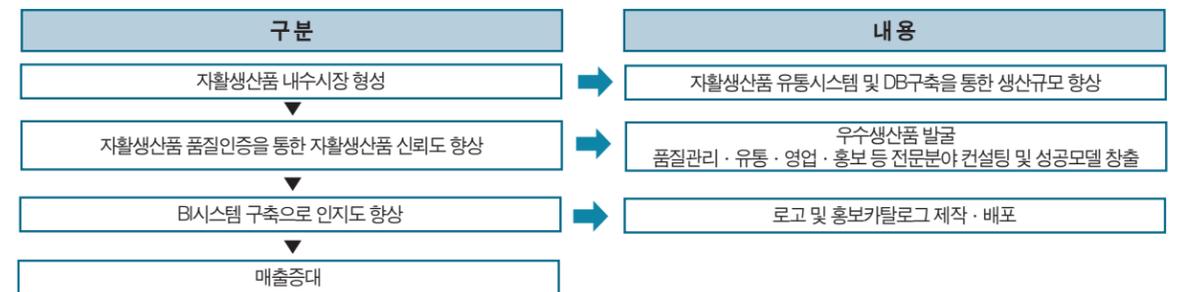
'10년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그 시작은 미미하겠지만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어 본다.

### ● 사업목표

비전	자활생산품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확대		
전략	내수거래 촉진을 위한 유통시스템 구축	품질 관리 및 개선 컨설팅 체계 구축	유통망 확대
실행 방안	DB 및 포털 구축	전문지식/기술 기반의 전문 마케팅 수행	기업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 ● 사업내용

- ① (내수시장 형성) 전국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별 생산품 DB 구축을 통한 내수 거래 촉진
- ② (유통망 확대) 지역사회를 기업 및 생협, 할인매장 등 자원을 입점 지원
- ③ (품질개선 컨설팅) 전문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자활생산품 품질 향상 및 효율적인 생산관리 지원
- ④ (홍보활동 강화) 세련된 디자인과 자활사업의 의미를 함께 담은 비 및 전국자활생산품목록 카탈로그 제작 배포



### ● 예산규모 : 156,500천 원

- 전국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간 내수 시장 형성 25,000천 원
- 생산품 품질관리 컨설팅 및 마케팅지원 101,700천 원
- 자활생산품 비· 카탈로그제작을 통한 홍보 지원 29,800천 원

### ● 수행기간 : 2010년 1월 ~ 12월 (12개월)

## 신규 사회서비스선도사업 현황

2008년 7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업형 경영지원 등을 통해 전문화된 사회서비스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사회서비스선도사업을 제안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다.

1차년도 돌봄사회서비스 프랜차이즈사업을 추진하는 (주)온케어를 비롯해 7곳의 사업수행기관이 선정 2008.9월~2009.8월까지 추진해왔다.

2차년도 사업 추진을 앞두고 복지부의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사업 확대 정책추진에 따라 자활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회서비스선도사업 신규아이템 발굴을 위해 2009.11월 사회서비스선도사업을 추가 제안 공모하였다.

이 공모에 자활관련 사업수행기관 3곳이 공모에 참여해 3곳 모두 선정되는 뜻 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표1 참고) 2차 공모에 선정된 기관은 각각 4억 5천만 원~7억 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수행기관별 대응투자금을 합해 2009.12월~2010.8월까지 9개월 가량 사회서비스선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표1) 신규 사회서비스선도사업 수행기관 현황

사업수행기간	사업명	내 용
대한국주거복지협회 (대표: 김영준)	주거복지 서비스 선진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주거복지 서비스 선진화와 고부가가치 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주거복지 증진</li> <li>○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서비스선진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서비스 제공</li> <li>- 주거복지 서비스의 선도적인 산업 분야 개발을 통한 신규 일자리 및 일자리 창출</li> <li>- 한국형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개발 및 신규시장 개척</li> <li>- 고효율에너지진단분야의 고부가가치사업 개발 및 육성</li> <li>- 물류 통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li> </ul> </li> <li>○ 사업대상: 주거 취약계층 및 일반 국민</li> <li>○ 사업비: 총 720,000천 원</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주거복지서비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시공 및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시공</li> <li>· 주택 에너지 효율 진단 사업 실시</li> </ul> </li> <li>- 주거복지 서비스 자체 물류센터 운영</li> <li>- 홍보 및 마케팅 사업</li> </ul> </li> <li>○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환경 개선 가능</li> <li>-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li> <li>- 주거복지 분야 시장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li> </ul> </li> </ul>

사업수행기간	사업명	내 용
주함깨일하는세상 (대표: 이철중)	주거위생환경개선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위생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중요성 확대</li> <li>- 청소업 1,964개 / 소독구충서비스업 512개 난립</li> <li>- 하지만 종사자 수 5만 8천여 명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2004년 말 현재 /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청소업종 전문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li> </ul> </li> </ul> </li> <li>○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위생환경 서비스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li> <li>- 청소업종의 선진화를 리드하는 선도사업체 운영</li> <li>- 시장개척과 상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제시</li> </ul> </li> <li>○ 사업대상: 전국민</li> <li>○ 사업비: 총 999,893천 원</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회원제 서비스</li> <li>- 기본과 옵션클러닝을 통한 회차서비스</li> <li>- 진단프로그램, 고가의 전문장비와 약품이용을 통한 전문위생 서비스 수행</li> <li>- 해피콜, AS 책임제 실시</li> <li>-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론, 현장실습교육 이수한 전문예코배치</li> </ul> </li> <li>○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뉴얼, 고객관리시스템, 교육훈련 등으로 서비스 고급화를 통해 청소업종의 선진화 기여</li> <li>- 새로운 고객층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li> </ul> </li> </ul>
강원광역 자활센터 (대표: 원응호)	자활사업 활성화 및 국민 먹거리 복지 실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질 높은 자활 및 지역내 먹거리 생산품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유통 판매사업 전개</li> <li>○ 사업분야: 유통, 온·오프라인 판매, 1차 식품 가공</li> <li>○ 사업지역: 1차 강원전역, 2차 수도권, 3차 전국</li> <li>○ 사업대상: 자활공동체, 사업단, 지역소농, 극빈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소비자대상) 대형급식업체(공공, 민간)</li> <li>※ 춘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1일 식수는 약 50,000식으로 1식당 2,500원으로 계산 시 1일 약 1억 2천5백 만 원의 급식을 제공</li> <li>- (2차 소비자대상) 일반 서민, 저소득 계층</li> </ul> </li> <li>○ 사업비: 총 660,000천 원</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 생산품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운영으로 상품 유통활성화</li> <li>- 디자인, 포장, 규격표준화 추진</li> <li>- 주력상품 선정 및 홍보</li> <li>- 소비자 조직 확보를 통한 유통체계 구축</li> <li>- 대규모 및 인지도 강화</li> <li>- 커뮤니티 비즈니스숍 운영 활성화 및 확대</li> </ul> </li> <li>○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 식량권 및 건강권 제고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li> <li>- 영농제품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생산자 수익 증대</li> <li>- 일자리 창출</li> <li>- 지역사회 재생과 로컬푸드 초석 마련에 기여</li> </ul> </li> </ul>



- ④ 고학년 진로지도 및 적성프로그램
- ⑤ 문제해결 집단프로그램 등

### 몸짱 프로그램

- 저소득층 학령전기 아동의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고 아동이 스스로 개인 위생관리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
- ① 방과후 간식지원
- ② 개인위생관리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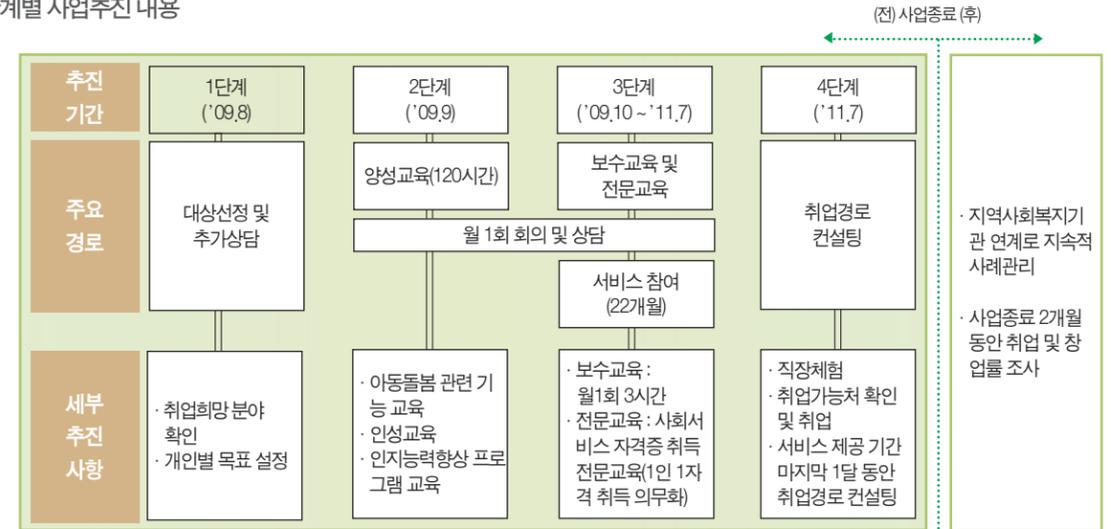
### 학교/학습지원 프로그램

- 학교부적응 및 학습장애로 인한 학업부진을 극복하고, 기초학력향상 지도와 학습동기 부여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① 1:1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 ② 학교부적응 및 학습장애 해소를 위한 고위험군 치료 지원 프로그램

### ● 사업수행기관 : 지역자활센터(35개 선정)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강원	춘천지역자활센터	춘천시 중앙로 3가 67-1 시민복지회관 6층	033253-4575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부천농협 5층	032323-9946
경기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1본동 148-30 부천종합사회복지관 203호	032349-2355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22 청원프라자 4층 403호	032654-7399
	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시흥시 대왕동 558-4 대왕빌딩 6층	031313-2733
	인산양지지역자활센터	인산시 단원구 원곡동 758 2층	031495-6845
	평택지역자활센터	평택시 합정동 734-6 4층	031658-4788
경남	김해지역자활센터	김해시 외동 1261-3 김해보건복지센터 별관 305호	055329-6370
	진해지역자활센터	진해시 풍호동 1번지 진해시종합사회복지관 내	055640-0200
경북	경산지역자활센터	경산시 중방동 859-4 동천빌딩	053811-5444
	봉화지역자활센터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66-1 2층	054672-4186
광주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북구 신안동 14-2 2층	062624-0377
	서구지역자활센터	서구 양동 456-120 3층	062351-3029
대구	북구지역자활센터	북구 산격1동 978	053952-8592
	중구지역자활센터	중구 남산4동 2482-1 까치@상가 104동	053256-3083
부산	북구지역자활센터	북구 덕천1동 389-1 광명빌딩 4층	051341-9841
	사상구지역자활센터	사상구 모라 3동 552번지	051301-8681
서울	광진지역자활센터	광진구 노유1동 3-9	02461-8373
	구로샐터지역자활센터	구로구 구로본동 409-54 여성복지회관	02856-0516
	노원지역자활센터	노원구 상계2동 404-7 2층	02899-3538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노원구 상계1동 1257번지 4층	02952-7184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서대문구 연희동 188-47	02324-1027
인천	성동지역자활센터	성동구 도선동 70번지창상빌딩 8층	022299-6658
	은평지역자활센터	은평구 수색동 318-7 해평빌딩 3층	02307-1186
	부평지역자활센터	부평구 부평3동 277-21 세원빌딩 201호	032625-1982
전남	중구지역자활센터	중구 전동 2-1 (구)인천여고 3층	032763-1988
	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	여주시 고소동 636-4	061663-8378
전북	해남지역자활센터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816-1	061632-0043
	남원지역자활센터	남원시동충동 199-9 사회복지종합센터 2층	063632-4747
제주	전주시지역자활센터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3-9번지	063232-8383
	수월읍지역자활센터	제주시 오라1동 1163-4 종합경기장야구장	064702-1104
충남	공주지역자활센터	공주시 신기동 725	041857-0029
	연기지역자활센터	연기군 조차원읍 남리 298	041868-1004
충북	제천지역자활센터	제천시 하소동 345	043648-2983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206-1	043288-1432

### ○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사업 설명회



사업수행기간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 체결



기초양성교육1



기초양성교육2

## 2009년 중앙·광역자활센터 하반기 워크숍

### 자활, 함께 비상하기!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 동안 [2009년 중앙·광역자활센터 하반기 워크숍]이 강원도 정선 소재 메이힐스 리조트에서 열렸다. 11월 9일 새로 부임한 중앙자활센터 원장(원장 정덕규)을 비롯한 6개의 광역자활센터(경기, 대구, 인천, 강원, 전북, 부산)센터장 및 직원 등 55명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워크숍은 중앙·광역자활센터 간의 사업계획 공유와 논의를 통한 자활사업 수행성과 향상, 종사자 리더십 의식 고양, 수행인력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중앙자활센터 정덕규 원장의 부임 인사와 중앙자활센터 직원소개, 각 광역자활센터 센터장의 인사와 참석 직원 소개가 있었다.

첫 번째 주제는 '2010년 자활지원 사업 추진계획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제도개선 T/F팀원으로 참여하는 사업교육팀 한성희 대리의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2010년 자활지원 사업 추진계획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정책추진 방향과 제도개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010년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수행성과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주제로 진행된 '세종대왕 리더십' 특강은 인문경영연구소 전경일 소장을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창조의 CEO, 세종'의 저자이기도 한 전경일 소장의 강의는 경제위기의 시대, 창조의 CEO 세종대왕의 국가경영을 통해 살펴보는 위기 극복 사례와 21세기 창조적 기업의 원천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생존과 발전의 측면에서 살펴

보는 '인문에서 배우는 경영'의 특강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리더십 의식을 고양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강의를 마치고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직원 간 교류의 시간을 함께 하였다.

둘째 날에는 분임토의로 제1분임 사업개발 및 지원 분야는 2009년 사업수행 평가와 2010년 사업방향(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제2분임 교육 분야는 2009년 자활사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별 실시현황을 발표하고 교육사업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자활! 함께 비상하기'의 주제로 열린 금번 워크숍은 중앙·광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이 함께 비상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세종대왕 리더십특강



기관별 종사자 소개

## 교육사업 소식

- 중앙자활센터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개월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2009도 지역자활센터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수립 및 성과분석 모델설계' 완료보고서에 근거하여 개발된 교육과정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 공통역량과정 중 자활입문 과정은 4월부터 10월까지 5곳의 광역자활센터 지원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광역자활센터가 없는 지역의 자활센터 종사자를 위한 과정은 대전에서 교육을 직접 실시하였다. 자활입문 과정을 162명의 종사자가 교육을 받았다.

- 계층역량과정으로 개발된 목표지향리더과정(실장)은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성과중심리더과정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각각 1박 2일씩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실시하였다.

- 중앙자활센터의 교육지원은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한 청소년자활지원관 실무자 워크숍과 3차(8.27~28, 9.24~26, 10.8~9)에 걸쳐 진행된 주거복지협회의 업종별마케팅 과정을 지원하였다.

-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강원도 정선 메이힐 리조트에서 개최한 중앙·광역자활센터 하반기 워크숍에는 55명이 참여하여 교육과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성에 참여하였다.

-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대전 유성의 레전드 호텔에서 직무역량 과정인 기획력강화과정, 마케팅혁신과정, 상담스킬-업 과정은 3개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 '장기근속재충진과정'은 인문과 역사 그리고 변화와 경영을 접목하여 심과 재충진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삼전도비 견학, 캠프아이어, 문익점생가견학, 목화시배유지 견학, 도천서원, 한의학 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국새전각전을 견학하였다. 역사현장을 견학하고 전경일소장으로부터 '문익점의 목화씨는 어떻게 도요타자동차가 되었는가?'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 온라인 연수원(cssf.studymart.co.kr)에 17개 과정의 영업/회계 부분을 개설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이 상시적인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자활회계 과정 2회, 공동체 회계과정 1회 등 총 3개 교육과정을 공동 주최하였다. 특히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충남 태안 오션캐슬에서 진행한 자활리더워크숍에는 정부관계자는 물론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임직원 등 자활분야의 리더들이 참여하여 자활정책방향에 대한 토론과 현장방문을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마이크로크레딧 동향

### 희망키움뱅크 지원 3차 사업 ('09년 11월 ~ '10년 2월)

올 4월에 시작한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뱅크사업은 10월까지 1, 2차 기금 약 200억 원을 통해 약 1,000여 건의 창업을 지원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3차는 19개 수행기관에서 119억 2천2백만 원 규모로 700여 저소득개인 및 자활공동체에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3차 수행기관 19개 중 새롭게 선정된 기관은 3곳이다. 그 첫 번째 기관은 사회연대은행으로 2005년~2008년까지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111개의 자활공동체를 지원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문 마이크로크레딧기관으

로서 타기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지원 사례의 배출을 기대한다.

두 번째 기관은 한국여성재단으로 2008년부터 진행한 “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쉬SOS”를 통해 이미 저소득여성가장의 생활자금 및 창업자금을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된 전국의 21개의 지역 여성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저소득 여성 대상의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밀착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관은 교정협회사. 교정협회는 주로 교정공무원의 복지확대를 주요미션으로 하며, 수용

#### ● 2009년 희망키움뱅크 3차 수행기관

연번	지역	선정기관	단체성격	사업지역(소재지)	배정액(백만 원)
합계			19개 기관		119,22
1	전국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마이크로파이낸스본부	사단법인	전국(서울 종로구)	1,500
2		소상공인진흥원	특수법인	전국(대전 서구)	700
3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사단법인	전국(서울 서대문구)	500
4		(사)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전국(서울)	1,000
5		한국여성재단	재단법인	전국(서울 마포구)	700
6		재단법인 교정협회	재단법인	전국(서울 서초구)	300
7		(사)기쁨과 희망은행	사단법인	경인(서울 성북구)	322
8	경기	경기광역자활센터	자활센터	경기(수원시)	1,000
9	인천	인천광역자활센터	자활센터	인천(남동구)	500
10	강원	강원광역자활센터	자활센터	강원(춘천)	500
11	충북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북지부	사단법인	충북(청주)	300
12	전북	전북광역자활센터	자활센터	전북(전주)	500
13		(사)전북실업자중환지원센터	사단법인	전북(전주)	500
14	전남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	사단법인	전남(장흥)	1,000
15	대구	대구광역자활센터	자활센터	대구(북구)	600
16	경북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북지부	사단법인	경북(칠곡)	300
17	부산	부산광역자활센터	자활센터	부산(연제구)	1,000
18	경남	(사)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사회복지은행	사단법인	경남(창원)	500
19	제주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제주지부	사단법인	제주(제주시)	200

자 교정교화업무를 지원하는 곳이다. 교정협회는 법무부와 함께 전국교정시설의 ‘취업·창업지원전담반’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이나 창업교육을 받은 재소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출소자들에게는 창업이후에도 사회복지도우미, 취업·창업지원 민관협력시스템 등을 통해 사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창업성공을 통해 사회복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교육운영

기존 강의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탈피해 참여형, 문제해결형, 실습중심형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운영을 해보는 기회를 가진다. 교육프로그램은 사전육구조사통해 요구되는 회계, 재무, 원가계산, 영업방법, 자가진단 등을 반영해서 설계했으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단계인 비즈스타트과정(9과목-3일18시간)과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단계인 비즈점프과정(10과목-2과

목선택\*6시간씩), 전문단계인 비즈오케이과정(6과목-1과목선택,12시간씩)이 설계되었다.

시범교육운영은 수도권 수행기관에서 1, 2차기금 지원으로 창업한 개인창업자와 자활공동체 경영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목, 토반(12/3~12/12)을 개설하여 중앙자활센터가 직접운영한다.

또한 비즈스타트과정은 3차 기금을 받은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각 수행기관과 중앙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비즈스타트과정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다.

### 희망키움뱅크 업무메뉴얼 배포

희망키움뱅크 업무메뉴얼이 약 4개월 동안의 작업을 거쳐 11월 초에 발간되어 희망키움뱅크 22개의 수행기관에 배포되었다. 업무메뉴얼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으로 더욱 창업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수행기관별 비즈스타트 교육계획

기관명	교육일정	장소	인원	교육진행방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1월 11일~13일	미정	70명	3일 6시간씩
한국여성재단	1월 3째주	미정	40명	1박 2일
경기광역자활센터	2월 3일~5일	경기광역자활센터	40명	3일 6시간씩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북지부	1월20일~21일 또는 1월 27일~28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15명	2일 6시간씩
강원광역자활센터	12월 15일~16일	원주 토지문화관	20명	1박 2일
전북광역자활센터	1월 4일~6일	전북광역자활센터	20명	3일 6시간씩
부산광역자활센터	12월 9일~12일	부산광역자활센터	20명	3일 5시간씩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 ‘희망리본프로젝트’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본격적 궤도에 오른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일을 통한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일-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이 시행 6개월이 지나며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별 대상에 맞는 일자리 발굴·연계 및 지속적인 취업 유지를 위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자활사업의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취업률·취업유지율·탈수급률 지표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자활센터(242개소)에 일률적으로 기관운영비를 지원하던 방식과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범사업은 경기, 부산 등 2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기 광역자활센터와 부산광역시자활센터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2천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인 9월말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한 취업자 고용유지율은 전체 취업자 대비 74.1%, 취업자 평균연봉은 1,378만 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자활사업의 성과(연평균 취업률 14%, 자활사업 참여시 연 최고급여액 960만 원)를 뛰어넘는 것으로, 특히 취업대상자 대부분이 기초수급자(79%), 4~50대(66%), 여성(68%), 고졸(55%) 등 취업이 어려운 요건들

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 □ 시범사업 수행지역 확대 실시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도에는 전북, 인천지역이 추가로 사업지역으로 선정, 현재 2개 수행지역(경기, 부산)에서 4개지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2011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 맞는 고용-복지 연계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향후 고용-복지 연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역과 수행기관에 대한 주기적 현장모니터링이 운영되고 있으며(중앙자활센터), 이를 토대로 전문연구기관(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이 사업효과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시범사업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 2010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2010년도에 실시되는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근처 주민자치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수행기관에 문의후 신청할 수 있다(경기광역자활센터(일자리원스탑센터) : 031-223-8219, 부산광역시자활센터(자활인력지원본부) : 051-861-8834).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홈페이지(<http://hoperibb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개요

### ◇ 개요

- 대상자 : 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2천 명(2010년도 3천 2백 명)
-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경기도(2010년 : 부산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 사업기간 : 2009년부터 3년간(1년 단위 성과 계약체결)

### ◇ 예산지원방식

- 1인당 서비스비용을 산정하여 지원액의 일부를 선지급한 후, 사업실적에 따라 나머지 지원액 지원(Outcome funding)

구분	기본금	성과급		
		취업(창업)	6개월 이상 지속시	탈수급*
1인당 지원액 (최대 430만 원)	150만 원	85만 원	85만 원	110만 원

\* 차상위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창업을 한 경우

### ◇ 대상자 지원서비스 내용(예)

1개월째	3개월 이내	4~5개월	6개월 이내	7~12개월
기초상담	지립여건 조성	지립능력 강화	일자리 지원	사후관리
개인별 계획수립 /서비스사정 계획	사회서비스 연계 /사정계획 평가	자활인지고취/취업준비교육/직업훈련/인턴십 과정	맞춤취업 알선/면접교육/ 구인처 알선	직업적응 상담 /근로유지기간 확인등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09.11.6)

## 자활복지포럼

현장-학계-정부의 3자가 모여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 자활복지포럼의 닷을 올리며

자활복지포럼은 자활지원논의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자활지원의 무대공간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중앙자활센터의 대외적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모임이다. 문제해결 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 경영, 경제,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와 연구자들의 분야별 시각을 모으고, 현장에서는 대안을 찾기 위한 탐구력과 실행력을 높이며, 정부의 후원과 지지를 모으기 위한 공론의 장인 자활복지포럼은 자활지원의 외연의 폭과 내면의 깊이를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 새로운 자활지원 흐름의 공개

—공개포럼을 개최하며—

자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시작점은 새로운 경제위기로 불리는 세계금융위기였다. 수급자, 차상위로 떨어지는 근로빈곤층의 확대, 그것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온 자활에 찾아온 제2의 기회이다. IMF 구제금융시기가 자활지원의 긴급대응(emergency plan)이었다면, 이제는 자활의 10년간 누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빈곤의 방어적 울타리(barrier net)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활지원제도의 서비스 내용과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취업서비스, 개인과 가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통합 그리고 이를 지원할 민간기관의 능력배양, 이 3자가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도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효과를 제고하고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대응력을 제고할 것이다.

포럼에서는 이러한 고용-복지 통합프로그램 작동 매커니즘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연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정부는 어떻게 지원하며 학계는 올바른 방향을 정립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현장과 정부, 학계의 논의를 집중시킬 공개적 행동이 필요했다.

그래서 자활복지포럼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연구집단 중 하나인 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공개하게 되었다. 자활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 학계의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 해외의 유사사례 분석, 올해 추진된 복지부, 노동부의 프로그램의 의미와 내용, 그 진행 정도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와 학계는 그 방향성에 있어 공감하고, 현장과 정부는 서로간의 이해차를 좁히며, 학계와 현장은 변화의 조건, 시기에 대해 문제인식을 함께 하는 계기를 만든 자리였다.

####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9.9.24(목), 13:00~17:30
- 장소 : 이화여대 이화삼성교육문화관 1층 대강당

#### □ 공개포럼 세부일정

자활정책의 현황과 미래	좌 장: 김상균(서울대 교수)
발표1: 자활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새로운 모색	발표자: 구인혜(서울대 교수)
발표2: 노동정책의 관점에서 본 자활정책	발표자: 김혜원(노동연구원 박사)
발표3: 영국의 고용서비스지역(EZ)사업 사례분석	발표자: 정원오(성공회대 교수)
토론	강병구 인하대 교수
	류만희 상지대 교수
	이상은 숭실대 교수
	김원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사무관

## 자활인큐베이팅사업 현황

맞춤형 자활을 위한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2004년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에서 처음 시행한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이 2009년 하반기 자활사업 추경예산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어 현재 136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자활인큐베이팅은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단 예산에 따라 참여자가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되어 오면 예산이 여유가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일방적으로 참여시키던 체계를 탈피해 참여주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활경로를 설계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자활경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136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되는 본 사업에는 총 2,045명(기관평균 16명)이 참여해 다양한 자활계획에 따라 경로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확대된 사업규모에 비해 참여자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수행경험 부족 등으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자활센터에서는 자활인큐베이팅사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자립지원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표준운영 모델을 보급하며, 참여자 자립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수행 및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DB를 구축 활용하고자 한다.

일부 현장에서는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이 취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오해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앞서 밝혔듯이 참여주민의 욕구와 역량을 정확히 탐색하고 그에 따른 자활경로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 인 것이다.

여기에서 취업, 창업, 자활근로사업 참여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의 역량과 욕구가 다양 하듯이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수행 역량과 욕구 또한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사업수행의 핵심은 참여주민의 맞춤형 자립자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노력과 의지가 모여질 때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 표1 시도별 사업 추진현황

	서울	경북	부산	울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경기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전남	합계
기관수	27	7	8	4	5	4	3	2	17	2	15	12	12	7	5	130
총인원	493	108	128	108	97	71	60	30	188	18	250	124	220	116	34	2045
평균인원	18	15	16	27	19	18	20	15	11	9	17	10	18	17	7	16

\* 자료출처 : 자활인큐베이팅사업 추진현황조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9.6월